

제1차 발표회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 조사결과

노회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순서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발표
14:10-15:25	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_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② 성평등과 안전보전에 대한 시민 의식 _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이강준 _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15:25-15:40	휴식
	토론
15:40-16:3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목차

발표	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4
	② 성평등과 안전보전에 대한 시민 의식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34
	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65
토론	① 평등과 공정 영역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90
	② 성평등 영역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96
	③ 안전·보건 영역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99

발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①

불평등 시대,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1.1. 국민 인식 조사의 목적 및 내용

○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Piketty 2014), 자본주의 국가들 간 차이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계급간 역학관계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차이에 의해 일차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편(Korpi 2006; Wright 2000), 장기적 변화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차이이다.

○ 불평등은 다수의 희생에 기초한 소수의 자원 독점 현상이다.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정의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다수의 희생자들이 불평등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2016-17년 촛불항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집합적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노회찬 2018; 이정진 2017). 촛불항쟁을 계기로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들도 포용하는 상생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5년 뒤 치러진 2022년 대선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의제화되지 않고 평등 가치는 실종된 채 치러졌고, 시민들의 선택은 사회적 사회통합보다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 성장이었다.

○ 불과 5년 만에 시민들은 평등과 사회통합 관련하여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식의 불평등 관련한 지향성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시민들이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수저계급사회 인식은 실체가 있는지, 불평등 현상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평등사회 대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이러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1.2. 설문조사 방법 및 자료 설명

○ 본 국민인식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이며, 표본 추출 방식은 연령, 권역별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으로 설계된 할당표집법으로서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등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을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서, 설문조사 담당 업체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해서 조사 진행되었다.

* 온라인 패널 중 표본설계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패널을 추출해서 이메일 등으로 조사 참여 링크를 발송하였고, 조사 참여 현황에 따라 부족한 표본배분 기준에 해당하는 패널에게 지속적으로 조사 링크 발송해서 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하여 최종 표본설계 기준에 따라 목표표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 설문조사는 2023년 02월 03일부터 02월 20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2000 사례가 유효 사례로 최종 표집되었다.

○ 본 설문조사 표집방법이 확률표집이 아니라 할당표집 방식의 비확률표집으로 수행되었고, 특정 종사상 지위 집단과 고용형태 집단의 경우 효율적인 설문결과 분석을 위해 부분적으로 비비례표집 방식을 활용했다. 그래서 표본의 분포를 모집단 분포와 일치시키기 위해 가중치를 산정했다. 가중치는 측정오류를 바로잡고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만든다.

○ 가중치가 적용된 표본의 구성은 종사상 지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가중치 적용된 표본의 구성

Klas4/Klas5	빈도	백분율
0 비경활인구	728	35.8
1 유고용 사업주	61	3.0
2 무고용 자영업자	239	11.9
3 관리전문직	134	6.6
4 노동자	839	41.3
- 정규직노동	470	23.2
- 비정규직노동	368	18.2
합계	2000	100.0

○ 본 설문조사 결과를 다른 나라들과 시민의식의 비교사회 분석을 위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조사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국가들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의 전형으로 꼽히는 네 국가를 선별했다: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모델 스웨덴, 대륙형 조정시장경제 모델 독일, 지중해형 조정시장경제 모델 스페인,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 미국.

* 우리 사회 시민의식의 시기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한겨레 신문사, KBS, 한국리서치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사용했다.

2. 불평등 실태와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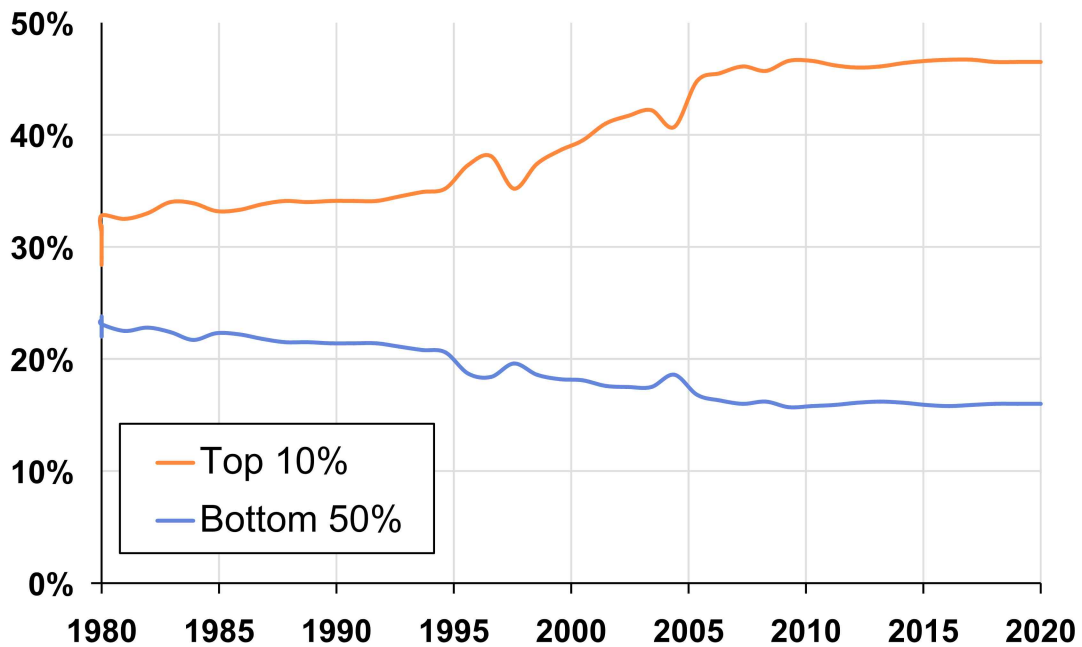
2.1. 불평등 실태

○ 피케티(Piketty 2014)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 $r > g$ ” (자산수익률 > 국민소득증가율) 부등식에 기초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메커니즘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사회들이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 심화 추세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과 불평등 심화 전망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한국사회 불평등 현상의 장기적 변화 추세:

* WID가 국제비교 가능한 신뢰할만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WIR 2022)를 보면, 한국사회는 1980년 이래 불평등 현상이 꾸준히 악화되다가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고 있다 (<그림 2.1>).

<그림 2.1> 한국 상위 10% 및 하위 50% 소득집단의 소득점유율, 1980-2021(WIR2022:219)



○ 구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소득집단별 세전 국민소득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시장경제모델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 소득 하위 50% 집단의 소득 점유율 대비 소득 상위 10% 집단의 배율인 소득배수를 비교해 보면,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모델 국가인 스웨덴이 가장 평등한 반면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 국가인 미국이 가장 불평등하다(〈표 2.1〉).

* 한국은 소득배수에서 스웨덴이 아니라 가장 불평등한 미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1〉 소득집단별 세전 국민소득 점유율, 2021년(WID) [WIR2022]

	소득집단별 국민소득 점유율				소득배수(상위 10%/하위50%)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	최상위 1%	
Sweden	30.8%	45.4%	23.8%	10.5%	6.47배
Germany	37.1%	43.9%	19.0%	12.8%	9.74배
Spain	34.5%	44.4%	21.1%	12.4%	8.18배
USA	45.5%	41.2%	13.3%	18.8%	17.02배
Korea	46.5%	37.5%	16.0%	14.7%	14.45배

2.2. 불평등 실태 국민 인식

○ 각 국 시민들의 소득불평등 인식 정도는 대체로 해당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불평등 인식 수준이 가장 낮다(〈표 2.2〉).

* 한국은 소득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 매우 높은 편이며, 높은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 종사상 지위 집단 간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사회불평등 인식 정도 국제 비교: “(한국의) 소득 차이는 너무 크다” 찬성 또는 반대?

(1 매우찬성 - 5 매우반대)

INCGAP 소득차이 너무 크다	스웨덴	독일W	스페인	미국	한국W
매우/다소 찬성	71.1%	86.0%	89.7%	62.3%	89.5%
찬성도 반대도 아님	16.7%	6.2%	4.7%	17.4%	6.7%
매우/다소 반대	9.5%	5.1%	4.0%	16.9%	3.8%
무응답	2.7%	2.8%	1.7%	3.5%	
합계	100%	100%	100%	100%	100.0%
빈도	1137	1395	1214	1581	1588
〈불평등 정도〉*					
[세전 소득상위10% 소득점유율]	0.302	0.374	0.347	0.452	0.464
[세후 가처분소득 배수(9분위/1분위)]	3.4	3.6**	4.8	6.3	5.2

* [세전 2010년대 평균 from WID table; [세후 2019년 OECD(<https://stats.oecd.org/>)], 가처분소득 배수는 1분위 소득 상한 대비 9분위 소득 상한의 배율;

** 독일 2018년 기준;

○ 한국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 정도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 없었음. 소득 차이 크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85-90% 수준에서 소폭 증감하고 있다(〈표 2.3〉).

〈표 2.3〉 한국 사회 불평등 인식정도 “(한국의) 소득 차이는 너무 크다” 찬성 또는 반대?
(1 매우찬성 - 5 매우반대)

INCGAP 소득차이 너무 크다	2003	2009	2011	2014	2023[B1_1]
매우/다소 찬성	93.3%	89.5%	84.5%	88.8%	87.7%
찬성도 반대도 아님	4.9%	6.7%	11.5%	8.9%	10.2%
매우/다소 반대	1.8%	3.8%	3.9%	2.4%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찬성-반대 (%)	91.5%	85.7%	80.6%	86.4%	85.6%
찬성/반대 (배수)	51.83	23.55	21.67	37.00	41.76

2.3. 불평등의 대물림 인식

- 한국은 세대간 사회적 지위 상승이동 비율이 여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표 2.4〉)
- ** 한국은 2009-23년 사이 직업지위 상승했다는 응답이 조금 높아졌는데, 여전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해당된다.

〈표 2.4〉 부친 대비 본인 직업의 사회적 지위 비교

V46 Q11 부친 대비 본인 직업	스웨덴	독일W	스페인	미국	한국W	2023 B9
아버지보다 훨씬/약간 더 높다 ①	44.3%	40.4%	46.6%	45.7%	36.7%	42.3%
거의 비슷하다	33.4%	36.1%	36.5%	25.9%	34.4%	29.7%
아버지보다 훨씬/약간 더 낮다 ②	22.3%	23.5%	17.0%	28.4%	28.9%	2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지위 상승 정도(%): ①-②	22.0%	16.9%	29.6%	17.3%	7.8%	14.2%
직업지위 상승 지수*	2.73	2.76	2.67	2.74	2.95	3.08

자료: [ISSP불평등 2009], KGSS 〈표 2327〉

- 종사상 지위로 보면 부친 보다 본인의 계급지위가 더 높다는 의견은 유고용 사업주의 경우 가장 많은 반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 * 이는 본인의 현재 사회적 지위가 특전적 위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반영한다.
- * 유고용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는 5점 척도에서 .619인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818, p=.000$).

〈표 2.6〉 종사상 지위집단 간 부친 대비 본인 직업의 사회적지위 인식 차이
(1 훨씬 높음, 5 훨씬 낮음)

	B9 중학교 시절 부친 직업 대비 현 본인 직업의 사회적 지위 수준 (높다 1,5)
0 비경활인구	3.33
1 유고용 사업주	2.44
2 무고용 자영업자	2.92
3 관리전문직	2.45
4 노동자	3.06
- 정규직노동	2.84
- 비정규직노동	3.34
전체 평균	3.08

3. 수저계급사회의 불공정성

3.1. 소득 수준의 공정성 기준

1) 소득 수준의 적절성

○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의견이 2009년에는 51.0%로 구미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62.0%에 달했다 (<표 3.1>). 이는 보상체계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하여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보상체계에 대한 불공정성 판단과 불만이 2009-2023년 사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표 3.1> 능력·노력 대비 자신의 소득 수준 적절성 평가: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SSP 2009]

V53(한66)	ISSP 2009년				한국	
	스웨덴	독일W	스페인	미국	2009 ISSP	2023 B5
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약간 더 적다	60.9%	49.7%	59.1%	47.0%	51.0%	62.0%
②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	35.7%	46.8%	37.2%	44.9%	43.9%	35.4%
③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약간 더 많다	3.4%	3.5%	3.8%	8.1%	5.0%	2.6%
①-③	57.5%	46.2%	55.3%	38.9%	46.0%	59.4%

○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의견은 피고용자 집단과 자영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3.2>).

* 하지만 유고용 사업주와 노동자 집단 사이의 차이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이도 .123에 불과하여 유의수준 .10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t=1.178, p=.239$)으로 나타나서, 집단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종사상 지위 집단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

	B5 본인 소득에 대한 의견 (적다 1,5)
0 비경활인구	2.31
1 유고용 사업주	2.20
2 무고용 자영업자	2.13
3 관리전문직	2.12
4 노동자	2.14
- 정규직노동	2.08
- 비정규직노동	2.22
전체 평균	2.20

2) 임금 결정 기준

○ 2023년 조사에서 임금 차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이고, 근속연수 순서는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양가족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모든 기준들에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유일하게 부양가족수의 경우 임금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더 크게 나타났다;

** 2018년 조사에서는 근무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업무능력이 그 뒤를 이었는데, 양자 사이의 중요도 차이도 컸다. 이후 근무태도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2023년 조사에서는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의 상대적 중요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업무능력이 경미하게나마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23년 사이 변화를 보면 모든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진 반면, 유일하게 근무태도의 상대적 중요성만 하락했다. 이는 노력보다 능력과 성과를 더 중시하며, 무능력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표 3.3〉 임금 결정 기준 평가: “B4.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요인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큰 차이 1,3 차이 없을 것)

요인별 임금차이 2023 B2	B4_1 업무 능력	B4_2 근무 태도	B4_3 근속 연수	B4_4 부양 가족수
① 임금이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	38.2	35.9	22.7	9.2
② 임금이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	57.3	57.4	67.6	45.1
③ 임금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4.5	6.7	9.7	4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① - ③	33.7	29.2	13	-36.4
〈비교〉				
2018(한국리서치) ① - ③*	13.7	38.3	2.1	-54.1
2018-2023 증감	20	-9.1	10.9	17.7

요인별 임금차이 2018(한국리서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근속 연수	부양가족수
①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	22.8	43.4	16.5	6.3
②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	68	50.5	70.1	34.4
③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9.1	5.1	14.4	6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① - ③	13.7	38.3	2.1	-54.1

* 한국리서치(2018) 조사결과는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유효응답의 빈도를 산정했음, “업무능력”은 “업무성과”와 “자질과 능력”의 평균값으로 사용했는데, “업무성과”와 “자질과 능력”의 값은 유사하여 시민들이 업무능력과 업무성과를 거의 동일시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리서치(2018). 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2월) 기획조사_공정성 [결과표]. 2018.3.30.

○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는 유고용 사업주와 관리전문직이 매우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으로 보는 반면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본다(〈표 3.4〉). 관리전문직의 경우 자신의 높은 보상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경우 이윤창출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 노동자와 관리전문직은 근속연수를 자영업자와 유고용 사업주에 비해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

* 모든 집단에서 업무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꼽는 반면, 부양가족수는 모든 집단들이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유고용 사업주와 노동자를 비교하면 모두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중시하는 가운데, 노동자는 양자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무태도에 비해 업무능력을 더 중시하고 있어 이윤동기에 충실함을 확인시켜준다.

〈표 3.4〉 종사상 지위 집단별 임금 결정 요인 평가: “B4.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요인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큰 차이 1,3 차이 없을 것)

요인별 임금차이	B4_1업무능력	B4_2근무태도	B4_3근속연수	B4_4부양가족수	평균
0 비경활인구	1.70	1.75	1.94	2.33	1.93
1 유고용 사업주	1.47	1.59	1.89	2.40	1.84
2 무고용 자영업자	1.60	1.70	2.00	2.42	1.93
3 관리전문직	1.51	1.59	1.79	2.33	1.81
4 노동자	1.69	1.70	1.78	2.38	1.89
- 정규직노동	1.66	1.68	1.77	2.39	1.88
- 비정규직노동	1.73	1.72	1.80	2.35	1.90
전체 평균	1.66	1.71	1.87	2.36	1.90

3) 소득 수준 적절성 & 임금 결정 기준

〈표 3.5〉 자신의 소득 수준 적절성 평가에 따른 임금결정 기준 인식 차이: 비경제활동 인구 제외, 경제활동 인구만 포함.

보수 수준	사례수	업무능력	근무태도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① 0 적당*	421	1.65	1.73	1.89	2.38
② +1 적음	851	1.64	1.66	1.80	2.38
전체	1272	1.64	1.68	1.83	2.38
①② 비교 t-test					
값 차이		.01	.08	.09	.00
t-value		.170	2.174	2.515	.105
유의확률		.865	.030	.012	.916

* 소득 적당 범주에는 “보수 많다” 30명 포함함;

○ 본인 능력·노력 대비 소득이 적다는 사람과 적당하다는 사람은 업무능력의 중요성과 부양가족수의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거의 동등하다(〈표 3.5〉). 하지만 근무태도와 근속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능력·노력 대비 소득이 적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태도와 근속연수를 더 중시함; 자신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근무태도와 근속연수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3.2. 수저계급사회

○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 성공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 한국도 높은 편에 속했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21-23년 사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기회균등 원칙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표 3.6>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6]

열심히 일하는 것	ISSP 2009년				한국 KGSS			2023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2009	2014	2021	B6
절대적으로/매우 중요하다①	75.6%	70.7%	68.5%	96.0%	87.2%	78.6%	76.9%	59.0%
대체로 중요하다	20.5%	25.5%	24.5%	3.5%	11.0%	18.3%	19.5%	36.0%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②	3.8%	3.8%	7.1%	0.4%	1.8%	3.1%	3.6%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05	1371	1201	1577	1598	1369	1204	2000
중요함-중요않음 (①-②)	71.8%	66.9%	61.4%	95.6%	85.4%	75.5%	73.3%	54.0%

○ 부유한 집안 출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구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표 3.7>).

* 부유한 집안 출신의 중요성은 2014-2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구미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표 3.7>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 출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유한 집안	ISSP 2009년				한국 KGSS			2023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2009	2014	2021	B7
절대적으로/매우 중요하다①	13.5%	28.4%	32.4%	29.6%	44.5%	44.6%	62.6%	59.9%
대체로 중요하다	33.8%	35.3%	29.3%	31.1%	35.8%	39.1%	26.5%	30.6%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②	52.7%	36.3%	38.3%	39.3%	19.6%	16.4%	10.9%	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91	1357	1198	1530	1596	1370	1203	2000
중요함-중요않음 (①-②)	-39.2%	-7.9%	-5.9%	-9.7%	24.9%	28.2%	51.7%	50.4%

○ 2009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인생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은 꾸준히 작아지고 부유한 집안출신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 왔다(<표 3.8>).

*그 결과 2023년 현재 부유한 집안출신이 열심히 일하기보다 경미하게나마 0.9% 포인트 차이로 더 중요하게 되었다.

* 이제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수저계급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표 3.8> 인생 성공 요인 상대적 평가 변화 (1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ISSSP불평등09] [KGSS]

	부유한집안출신①	열심히일하는것②	
[ISSP 불평등2009]	V6 Q1a	V10 Q1e	① - ②*
스웨덴	3.52	2.08	1.44
독일W	3.07	2.18	0.89
스페인	3.12	2.14	0.98
미국	3.17	1.60	1.57
한국W	2.64	1.71	0.93
[KGSS]	SUCDWLTH	SUCDEFRT	① - ②*
2009 KGSS	2.64	1.71	0.93
2014	2.58	1.91	0.67
2021	2.25	1.90	0.35
2023 B6&B7	2.25	2.30	-0.05

* 값이 클수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의미함.

○ 열심히 일하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유고용 사업주가 가장 강한 반면 노동자가 가장 약하다(<표 3.9>). 반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중요성은 무고용 자영업자와 노동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을 결여한 집단의 박탈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부유한집안 출신의 중요성은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열심히 일하기와 부유한 집안출신의 중요성 차이를 비교해보면, 노동자 집단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유고용 사업주와 관리전문직은 열심히 일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출신 배경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하며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

* 노동자 집단을 사업주와 관리전문직과 비교해 보면, 사업주와는 유의수준 .05에서(t=2.477, p=.013), 관리전문직과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t=3.678, p=.000)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간 격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종사상 지위 집단별 인생 성공 중요 요인들

	B6 인생 성공에 있어 `열심히 일하기` 중요성 (중요 1,5)	B7 인생 성공에 있어 `부유한 집안출신` 중요성 (중요 1,5)	B6 - B7
0 비경활인구	2.29	2.37	-0.08
1 유고용 사업주	2.01	2.23	-0.22
2 무고용 자영업자	2.19	2.11	0.08
3 관리전문직	2.24	2.48	-0.24
4 노동자	2.36	2.15	0.21
- 정규직노동	2.41	2.14	0.27
- 비정규직노동	2.30	2.16	0.14
전체 평균	2.30	2.25	0.05

3.3. 상승 이동 어려움과 사회질서의 불공정성

1) 세대내 상승이동 가능성

○ 노력을 통해 상승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2013년 27.3%에서 43.7%로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더 크다 (<3.10>).

<3.10>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동 가능성: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KBS경제13: 문9)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2013 KBS [q7]		2023 [B10]	
유효	1 매우 높은 편이다	1.7	27.3	3.4	43.7
	2 대체로 높은 편이다	25.6		40.3	
	3 대체로 낮은 편이다	54.9	72.8	48.1	56.3
	4 매우 낮은 편이다	17.9		8.2	
	합계	100.0		100.0	

○ 세대내 상승이동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집단은 유고용 사업주인 반면, 노동자 집단이 가장 낮게 보고 그 다음으로 무고용 자영업자가 낮게 보고 있다(<3.11>). 사업주는 본인의 성공사례를 일반화하고 상승이동 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자로 규정하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노동자 집단을 사업주와 관리전문직과 비교하면, 사업주와의 차이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t=2.888$, $p=.004$), 관리전문직과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t=4.318$, $p=.000$)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1> 종사상 지위 집단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동 가능성

	B10 일생동안 노력 시, 개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높다 1,5)
0 비경활인구	2.54
1 유고용 사업주	2.44
2 무고용 자영업자	2.63
3 관리전문직	2.43
4 노동자	2.71
- 정규직노동	2.70
- 비정규직노동	2.72
전체 평균	2.61

2) 가난과 사회적 문제

○ 경제활동 인구에 한정하여 2003년과 2023년을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가난이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이 11.2% 포인트 증가하여 63.8%에 달한다(〈3.12〉). 이는 가난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과반을 크게 웃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대도 61.8%에 달하고 있다.

* 이처럼 가난과 비정규직 문제 등 불평등 문제의 핵심 현상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3.12〉 가난의 원인: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의 1,4 반대)

	[2003] F4_2 경활인구 한정	[2023] C8_1 비경활 포함	2023 경활인구 한정	2003-23 경활인구 한정
1) 적극 동의	7.5	2.8	2.4	-5.1
2) 대체로 동의	39.9	33.0	33.9	-6
3) 대체로 반대	33.4	52.5	51.3	17.9
4) 적극 반대	19.2	11.7	12.5	-6.7
합계	100.0	100.0	100.0	
① 적극/대체로 동의	47.4	35.8	36.3	-11.1
② 적극/대체로 반대	52.6	64.2	63.8	11.2
합계	100	100	100.1	
② - ①	5.2	28.4	27.5	22.3

* 2003 조사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유효 응답의 분포를 산정함;

**2003년 조사연구는 비경활인구를 배제하고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23년 조사는 비경활 인구를 포함하여, 여기에서는 비교연구를 위해 2023년 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를 산정하여 추가함; 이하 2003-23년 비교연구의 경우 동일함;

자료: 2003년 조사결과는 조돈문(2003:187; 2011: 320)에서 산정.

○ 가난을 개인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유고용 사업주가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반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반대한다(〈표 3.13〉).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가난이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을 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누가 빈곤층이 되는가는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배경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 노동자와 사업주의 차이는 .239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566$, $p=.010$).

〈표 3.13〉 종사상 지위별 가난의 원인 의견 (동의 1,4 반대)

	C8_1 가난은 개인 능력 부족
0 비경활인구	2.72
1 유고용 사업주	2.53
2 무고용 자영업자	2.74
3 관리전문직	2.65
4 노동자	2.77
- 정규직노동	2.76
- 비정규직노동	2.77
합계	2.73

자료: 2003년 조사결과는 조돈문(2003:187; 2011: 320)에서 산정.

3) 정상 성공 & 부패 불가피성

○ 2009년 조사에서 한국은 구미국가들에 비해 성공 위한 부패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훨씬 더 컸다. 이후 성공 위한 부패 불가피성 의견은 점점 더 강해져서 구미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표 3.14〉).

〈표 3.14〉 정상 성공 부패 불가피성 “오늘날 한국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

(1 매우 동의, 5 매우 반대) [ISSP불평등09] [KGSS]

정상 오르려면 부패	ISSP 2009년				한국 KGSS		2023 B8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2009	2014	
매우/약간 동의①	8.5%	27.6%	25.8%	14.7%	50.1%	51.7%	57.5%
동의도 반대도 아님	17.4%	14.8%	8.9%	16.1%	21.1%	21.3%	21.7%
매우/약간 반대②	74.1%	57.6%	65.3%	69.2%	28.7%	27.0%	2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989	1321	1196	1526	1589	1370	2000
동의-반대 (①-②)	-65.6%	-30.0%	-39.5%	-54.5%	21.4%	24.7%	36.6%

○ 부패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식은 관리전문직, 자영업자, 사업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15〉). 반면 부패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은 노동자인데, 세속적 성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며, 사회의 제재·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패 불가피성 인식의 양극단인 노동자와 관리전문직 사이의 차이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939, p=.053$);

* 전체 응답자의 57.5%가 부패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하는 집단의 세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질서의 불공정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비해 동의 하는 인구가 점점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5〉 종사상 지위 집단별 정상 성공 부패 불가피성

	B8 `오늘날 한국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에 대한 의견 (동의 1,5)
0 비경활인구	2.73
1 유고용 사업주	2.53
2 무고용 자영업자	2.60
3 관리전문직	2.64
4 노동자	2.43
- 정규직노동	2.43
- 비정규직노동	2.44
전체 평균	2.58

○ 노동자는 상승 이동 가능성, 가난 사회적 문제, 정상 도달 부패 불가피성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표 3.16〉).

* 한편 사업주의 경우 정상 도달 부패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에 표집된 유고용 사업주들이 전체 사업주 모집단에서 사업체 재정 규모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여 자신들을 정상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사회 정상이란 밀즈(C.W. Mills)가 얘기하는 권력엘리트 수준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권역의 최상층, 즉 재벌급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6〉 종사상 지위 집단별 사회이동 평가

	상승이동 가능성	가난 개인 능력 부족	정상 부패 불가피성
1 유고용 사업주	H	H	H
2 무고용 자영업자	M	L	M
3 관리전문직	H	M	M
4 노동자	L	L	H

3.4. 소결

○ 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면,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고,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개인 능력 부족 탓이고 정상급으로 성공하는데 부패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고, 가난은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의 실패로 보고, 정상 도달 위해서는 부패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우리 사회 시민들은 구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성공을 위한 부유한 집안출신의 중요성을 월등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의 평가에서는 구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인 수저계급사회로 접어든 것이며, 수저계급사회에서 불평등이 대물림되며 기회 균등성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4. 불평등 문제와 정부의 역할

4.1. 소득불평등과 정부 정책

1) 정부 정책 & 재정지출 증대 요구

○ 2023년 조사에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해 실업수당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들에서 감액하기보다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표 4.1〉).

* 재정지출 증액 의견이 높은 순서를 보면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건 > 돌봄, 치안 >> 국방 > 교육, 노인연금 >> 실업수당.

* 사회복지 영역들 가운데 보건의료와 돌봄은 증액 의견이 높아서 사회복지 확대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실업수당의 경우 현수준 유지 의견을 보인 것은 당사자 개인 책임 크다고 보는 탓으로 해석된다.

* 또한 노인연금보다 돌봄서비스(아동보육, 노인요양 등) 지원이 더 높은 것은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정부 영역별 재정지출 증감: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1 훨씬 더 늘려야, 5 훨씬 더 줄여야; 중간값 3) (ISSP 정부역할 2016) [ISSP정부역할16: 한국 설문 87]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노인연금	실업수당	돌봄
스웨덴	2.48	1.82	2.01	2.17	2.69	2.03	2.95	
독일	2.25	2.00	2.02	1.70	3.05	2.11	2.74	
스페인	2.39	1.73	2.43	1.69	3.33	1.99	2.21	
미국	2.57	2.26	2.50	1.95	2.70	2.28	2.88	
한국 2016	2.25	2.18	2.13	2.32	2.68	2.44	2.61	
2023 C5	2.22	2.26	2.39	2.61	2.52	2.62	3.06	2.36
2016-23 증감	-0.03	0.08	0.26	0.29	-0.16	0.18	0.45	-

○ 2016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국방 영역과 환경 영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영역별 재정지출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높다. 이는 작은 정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예외적으로 재정지출 증액 의견이 크게 상승한 영역은 국방 영역인데,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불안 심화된 탓으로 해석된다. 환경도 경미한 수준에서 증액의견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증액 의견이 여타 정책부문에 비해 가장 높아서 정부의 환경보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보건의료 돌봄의 정부지출 확대 의견은 비경활인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활인구 내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거의 없다(〈표 4.2〉). 유고용 사업주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주 대신 정부가 책임을 지게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 종사상 지위 집단별 정부 영역별 재정지출 증감 의견: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액 1,5 감액) [ISSP정부역할16: 한국 설문 8기]

	환경	보건의료	치안	교육	국방	노인연금	실업수당	돌봄
0 비경활인구	2.27	2.29	2.42	2.59	2.50	2.61	3.03	2.45
1 유고용 사업주	2.09	2.18	2.29	2.58	2.46	2.62	3.39	2.29
2 무고용 자영업자	2.22	2.23	2.46	2.60	2.54	2.62	3.27	2.31
3 관리전문직	2.14	2.25	2.38	2.51	2.51	2.59	3.04	2.30
4 노동자	2.20	2.25	2.36	2.64	2.54	2.63	3.01	2.31
- 정규직노동	2.17	2.24	2.34	2.61	2.58	2.69	3.09	2.28
- 비정규직노동	2.24	2.26	2.38	2.68	2.49	2.56	2.90	2.34
합계	2.22	2.26	2.39	2.61	2.52	2.62	3.06	2.36

2)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역할

○ 2009년에 비해 소득격차 너무 크다는 의견은 아주 경미하게 약화되어 거의 그대로인 반면 소득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은 많이 약화되었음, 그 결과 현실인식과 정책대안의 괴리는 더 커졌다(〈표 4.3〉 〈표 4.4〉).

* 2009년 이래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할에 대한 지지 의견이 하락하고 있어 작은정부론 관점이 확산되고 있으며 소득격차 축소의 정부 책임론 약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할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다.

〈표 4.3〉 국가별 소득 격차 인식 및 정부 역할 의견 (1 매우찬성-5 매우반대) [ISSP불평등09]

	V32 Q6a 소득 차이 너무 크다	V33 Q6b 소득격차축소 정부책임	V34 Q6c 실업자생활 수준 정부책임	V35 Q6d 정부빈민혜택 축소해야	V33/V32 (소득격차 인식 정부 정책 전환 지수)*
스웨덴	2.07	2.46	2.00	3.87	1.19
독일	1.63	2.32	2.40	3.93	1.42
독일W	1.68	2.39	2.43	3.92	1.42
스페인	1.81	2.04	2.00	3.86	1.13
미국	2.29	3.35	2.88	3.54	1.46
한국W	1.70	2.07	1.93	4.09	1.22
2023	1.75	2.21			1.26

* 전환 지수 클수록 현실 인식과 정책대안의 괴리 큼.

〈표 4.4〉 한국 소득 격차 인식 및 정부 역할 의견의 시기별 변화 (1 매우찬성-5 매우반대) [KGSS]

	INCGAP 한국의 소득차이 는 너무 크다는 주장에 대 한 찬반 의견	GOVEQINC 소득 격차를 줄이 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 장에 대한 찬반 의견	V33/V32 (소득격차 인식 정부정책 전환 지수)
2009	1.70	2.07	1.22
2010		2.20	
2011	1.75	2.25	1.29
2014	1.77	2.20	1.24
2021		2.50	
2023	[BI_1] 1.75	[BI_2] 2.21	
2009-21 증감	0.07 (2009-14)	0.43	0.02 (2009-14)
2009-23 증감	0.05	0.14	
2021-23 증감	-0.02	-0.29	
〈참조〉			
미국 2009년	2.29	3.35	1.46

○ 소득격차 크다는 의견과 소득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은 노동자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관리전문직에서 낮게 나타났다(〈표 4.5〉). 소득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은 소득불평등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크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소득불평등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 소득차이 축소 정부 책임 의견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가장 강한 반면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약한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과의 차이가 .09로 나타났는데($t=1.209$, $p=.227$), 이는 유의수준 .10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5〉 종사상 지위 집단별 소득 격차 인식 및 정부 책임 의견

Klas4/Klas5	B1_1 한국의 소득 차이는 너무 크다 (찬성 1,5)	B1_2 소득차이 축소는 정부의 책임 (찬성 1,5)
0 비경활인구	1.77	2.23
1 유고용 사업주	1.69	2.27
2 무고용 자영업자	1.73	2.16
3 관리전문직	1.82	2.33
4 노동자	1.72	2.19
- 정규직노동	1.73	2.23
- 비정규직노동	1.72	2.14
전체 평균	1.75	2.21

○ 응답자 중 87.8%가 소득차이 크다고 봤고, 소득차이 크다는 사람은 소득차이 축소가 정부 책임으로 보는 비중이 70.4%로 높다(〈표 4.6〉). 소득 차이가 크다고 볼수록 소득차이 축소를 정부 책임으로 보는 비중이 더 커진다. 이는 불평등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할수록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반면 소득차이 작다고 보는 사람들은 소득차이 축소가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비중이 40.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표 4.6〉 종사상 지위 집단별 소득 격차 인식 및 정부 책임 의견 교차표

RB1_1	RB1_2	소득차이 축소 정부 책임			전체
		정부책임 아님	중립	정부 책임	
소득 차이	소득차이 작다	40.5%	21.4%	38.1%	100.0%
	중립	24.5%	53.9%	21.6%	100.0%
	소득차이 크다	7.1%	22.6%	70.4%	100.0%
	전체	9.6%	25.8%	64.7%	100.0%

4.2. 사회복지 증세 필요성 및 증세 부담 의향

○ 사회복지 위한 증세에 대해 2003년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못미쳤는데, 이후 찬성 의견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아졌다(〈표 4.7〉).

〈표 4.7〉 사회복지 증세: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2003 F4_9	2023 C9_1	2003-23 증감
1) 적극 동의	7.8	5.2	-2.6
2) 대체로 동의	24.3	48.2	23.9
3) 대체로 반대	41.3	40.8	-0.5
4) 적극 반대	26.6	5.8	-20.8
합계	100.0	100.0	0
적극/대체로 동의	32.1	53.4	21.3
적극/대체로 반대	67.9	46.6	-21.3
합계	100	100	

○ 2016년 ISSP 조사에서 한국은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고소득자에 부과된 세금이 적다는 의견이 더 강했다(〈표 4.8〉). 한국에서 고소득자 세금이 적다는 의견이 2016년 이후 좀 약화되기는 했으나, 2023년에도 고소득자 세금이 적다는 의견이 52.7로 많다는 의견 23.1%의 두 배 정도로 더 많다.

〈표 4.8〉 소득수준별 과세율 평가: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세금이란 임금공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말합니다.”

(1매우많다, 5매우적다)

V51-V53	고소득자 세금	중간소득자 세금	저소득자 세금
스웨덴	3.41	2.71	2.11
독일	3.66	2.49	2.02
스페인	3.80	2.21	1.73
미국	3.35	2.39	2.28
한국	3.95	2.75	2.32
2023	3.39		

자료: ISSP정부역할16.

○ 사회복지 증세 의견은 급증했지만 사회복지 증세 부담 의향은 그렇지 않다.

* 복지 증세 부담 의향은 2015년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촛불항쟁과 정권교체로 2017년 크게 상승하여 70%를 넘어섰다가, 이후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표 4.9〉).

**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개혁 정책을 폐기하면서 증세 부담 의향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증세 부담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서 2023년에는 증세부담 반대 의견이 64%까지 높아졌다.

〈표 4.9〉 복지증세 부담 의향: “사회복지 확대 위해 세금을 더낼 의향 있는가?”

한겨레조사	증세 납부 찬성	증세 납부 반대
2015.5	50%	50%
2017.3-4	65.3%	31.5%
2017.8	71.7%	26.2%
2019.9	41.7%	58.3%
2023.2 B3	36.3%	63.7%

자료: 2015-19 각년도 한겨레 의뢰 여론조사.

○ 사회집단간 증세 부담 의향의 차이가 큰데, 유고용 사업주와 관리전문직이 가장 큰 반면, 노동자가 가장 작고 무고용 자영업자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고소득 기득권층일수록 증세부담 의향이 높다는 것은 증세부담 능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복지 증세의 잠재적 최고 수혜자인 노동자와 무고용 자영업자가 복지 증세 부담 의향이 가장 낮은 것은 조세제도 및 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불신은 물론 복지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흡한 탓으로 해석된다.

* 유고용 사업주와 노동자를 비교하면 복지 증세(C9_1)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복지증세 부담 의향에서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 비해 세금 부담 의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종사상 지위 집단별 조세 관련 의견

	C9_1 사회복지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동의 1,4 반대)	B2. 고소득자 세금 지불 수준 (높다 1,5)	B3. 사회복지 확대 세금 지불 의사 (있다 1,2)
0 비경활인구	2.50	3.37	1.63
1 유고용 사업주	2.48	3.28	1.53
2 무고용 자영업자	2.45	3.55	1.62
3 관리전문직	2.49	3.33	1.55
4 노동자	2.45	3.39	1.67
- 정규직노동	2.47	3.33	1.67
- 비정규직노동	2.44	3.45	1.65
전체 평균	2.47	3.39	1.64

○ 사회복지 위해 증세할 필요 없다는 의견 가진 사람의 거의 모두인 87.0%는 복지확대 위한 증세 부담할 의향 없다고 답한 반면, 사회복지 위해 증세할 필요 있다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절반을 조금 넘는 56.6%만이 복지확대 위한 증세 부담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표 4.11〉). 그결과 복지증세 필요성 여론에 비해 증세 부담 의향 여론이 약하고 도리어 증세 부담 거부 의견이 더 크고 계속 커지는 추세다.

〈표 4.11〉 복지 증세 필요성 vs 증세 부담 의향의 교차표

2013년 C9_1	B3	복지 확대 증세 부담 의향		전체
		부담의향 없음	부담의향 있음	
사회복지 위한	복지 증세 불필요	87.0%	13.0%	100.0%
증세 필요성	복지 증세 필요	43.4%	56.6%	100.0%
	전체	63.8%	36.3%	100.0%

5. 바람직한 사회 방향과 대안사회 모델

5.1. 사회적 가치: 성장 vs 분배

○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항상 성장을 중시하는 의견이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표 5.1〉).

**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013-18년 사이 20% 수준에서 부침했었는데 2023년은 13.0%로 크게 하락했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15% 안팎에서 부침했었는데 2023년은 4.0%로 급락했다.

* 2018년 이후 2023년 사이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60% 정도 수준에서 83%로 급상승하는 가운데 성장과 분배 중시 의견 모두 하락했지만, 성장 중시 여론은 분배 중시 여론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

〈표 5.1〉 성장·분배 가치에 대한 생각: “귀하는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더 중요하다 (%) ①	분배가 더 중요하다 (%) ②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성장의 상대적 중요도 [①-②] (%)
2013	20.5	16.4	63.1	4.1
2014	20.3	13.8	65.9	6.5
2015	22.6	17.5	59.8	5.1
2016	19.0	17.1	63.9	1.9
2017	20.6	15.8	63.6	4.8
2018	21.5	13.7	64.8	7.8
2023 C1	13.0	4.0	82.9	9.0

자료: 2013-18년 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 종사상 지위 집단별로 보면 분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과 공동체보다 개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집단 사이 차이는 크지 않다(〈표 5.2〉).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작게나마 성장보다 분배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표 5.2〉 종사상 지위 집단별 성장·분배 가치에 대한 생각

	성장이 더 중요	모두 동일하게 중요	분배가 더 중요	전체
0 비경활인구	16.1%	80.2%	3.7%	100.0%
1 유고용 사업주	13.1%	83.6%	3.3%	100.0%
2 무고용 자영업자	13.0%	82.8%	4.2%	100.0%
3 관리전문직	9.0%	85.8%	5.2%	100.0%
4 노동자	11.1%	84.8%	4.2%	100.0%
- 정규직노동	13.6%	83.0%	3.4%	100.0%
- 비정규직노동	7.9%	87.0%	5.1%	100.0%
전체 평균	13.0%	82.9%	4.0%	100.0%

5.2. 바람직한 국가 성격: 경제적 풍요 vs 평등·복지

○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에 대해 시민들은 2010년 조사와 2023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를 최우선으로 꼽았다(〈표 5.3〉). 다음은 안보와 치안 걱정 없는 나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음을 이었다.¹⁾

* 2010-23년 사이 지난 10 여년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변화가 없이 13%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대한 선호도는 56.0%에서 49.9%로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시민의 절반이 선호하고 있다.

〈표 5.3〉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 “귀하께서/당신이 바라는 국가는 다음 중 어떤 나라인가요?” (KBS미래10: 질문12)

바라는 국가	KBS 2010. 질문 12(%)	2023 C3(%)	2010-23 증감(%)
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13.5	13.8	0.3
② 안보와 치안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	15.8	16.2	0.4
③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	56.0	49.9	-6.1
④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	5.5	4.8	-0.7
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	8.8	14.9	6.1
⑥ 기타	0.5	0.5	0
합계	100.0	100.0	

○ 평등 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도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유고용 사업주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5.4〉).

* 경제적 풍요 사회에 대한 선호도는 유고용 사업주의 경우 여타 집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관리전문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4〉 종사상 지위 집단별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 “귀하께서 바라는 국가는 다음 중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 풍요	안보치안 안전	평등과 복지	개성과 다양성	상호신뢰	기타	전체
0 비경활인구	13.5%	14.7%	47.2%	5.8%	18.0%	.8%	100.0%
1 유고용 사업주	23.0%	18.0%	37.7%	4.9%	16.4%	.0%	100.0%
2 무고용 자영업자	12.6%	18.4%	49.8%	3.8%	15.5%	.0%	100.0%
3 관리전문직	9.0%	17.9%	51.5%	5.2%	14.9%	1.5%	100.0%
4 노동자	14.5%	16.4%	52.8%	4.1%	11.9%	.2%	100.0%
- 정규직노동	15.5%	18.1%	51.9%	3.4%	10.6%	.4%	100.0%
- 비정규직노동	13.0%	14.4%	54.1%	4.6%	13.6%	.3%	100.0%
전체 평균	13.8%	16.2%	49.9%	4.8%	14.9%	.5%	100.0%

1) 한편 2008년 문화관광부 가치관 조사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에서 배울 점으로 경제수준, 복지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5.3. 바람직한 대안사회 모델: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vs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2004년 조사에서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2023년 조사에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5.5〉).

* 2004년과 2023년 사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선호 의견은 8.3% 포인트 하락한 만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선호 의견은 8.3% 포인트 하락하고, 기타 응답은 3.2%로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과반 여론의 자리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다.

〈표 5.5〉 한국사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 “귀하께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2004.5.7-9)

바람직한 방향	2004 유효응답	2023 C4	2004-23 증감
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45.2%	53.5%	8.3%
②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51.6%	43.3%	-8.3%
③ 기타	3.2%	3.2%	0.0%
전체	100.0%	100.0%	

* 한겨레 조사는 모름/무응답 9.3%와 결손사례 3.9%를 제외한 응답자 86.8%를 기준으로 유효응답의 분포를 산정했음;

○ 노동자들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선호도는 43.9%에 불과해 전체 평균 43.3% 수준에 머물러 자영업자보다도 더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5.6〉).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표 5.6〉 종사상 지위 집단별 한국사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기타	전체
0 비경활인구	56.3%	40.6%	3.2%	100.0%
1 유고용 사업주	52.5%	44.3%	3.3%	100.0%
2 무고용 자영업자	44.1%	51.7%	4.2%	100.0%
3 관리전문직	56.0%	39.6%	4.5%	100.0%
4 노동자	53.4%	43.9%	2.7%	100.0%
- 정규직노동	54.6%	43.1%	2.3%	100.0%
- 비정규직노동	51.9%	44.8%	3.3%	100.0%
전체 평균	53.5%	43.3%	3.2%	100.0%

○ 종사상 지위 집단 별로 평등·복지국가 지향과 복구식 사회민주주의 선호 정도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를 제외한 다른 세 집단의 경우 상당한 편차를 보여준다(〈표 5.7〉).

* 유고용 사업주의 경우 평등·복지 국가 지향 정도는 매우 낮지만 복구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 수준을 조금 상회한다. 이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장경제 모델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상생을 통해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함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Economist 2013 참조).

* 한편 노동자와 관리전문직의 경우 평등·복지국가 지향 정도에 비해 복구식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다. 관리전문직은 스웨덴의 사무직·전문직 노동자들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여도에 비해 보상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자들은 평등·복지국가 지향은 가장 높은 반면 이를 실현하는 복구식 사회민주주의 선호도는 전체 국민 평균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본의 일방적 지배 대신 공동결정제 등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노동과 자본의 동등·상생, 보편주의 복지국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무고용 자영업자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상응함을 인지한 탓으로 해석된다.

* 유고용 사업주와 노동자를 비교하면 평등국가지향에서는 .05 수준에서 노동자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지향성을 보이지만,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선호도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차이만 보이고 있어 .10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다($t=.050, p=.960$).

〈표 5.7〉 종사상 지위 집단별 평등·복지 국가 지향 및 복구식 선호도

	① 평등국가 지향 (0,1)	② 복구식 선호 (0,1)	① - ②
0 비경활인구	.4713	.4055	0.0658
1 유고용 사업주	.3706	.4416	-0.0710
2 무고용 자영업자	.4977	.5164	-0.0187
3 관리전문직	.5166	.3932	0.1234
4 노동자	.5279	.4383	0.0896
- 정규직노동	.5190	.4310	0.0880
- 비정규직노동	.5393	.4477	0.0916
전체 평균	.4982	.4328	0.0654

○ 바라는 국가 유형으로 “빈부격차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를 선택한 응답자들 가운데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한 비중은 55.2%에 불과했고 42.1%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표 5.8>).

* 미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복지제도가 저발달된 국가임에도 대안사회 모델로 선택했다.

<표 5.8>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 & 바람직한 사회 발전 방향: 대안사회 기준 & 모델의 교차표

		C4 희망하는 국가 방향			전체	①/② 배율
		①미국식 자유민주주의	②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③기타		
V3 바라는 국가 유형	1)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77.5%	21.0%	1.4%	100.0%	3.7
	2)안보와 치안 걱정없는 안전한 나라	63.8%	34.1%	2.2%	100.0%	1.9
	3)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	42.2%	55.2%	2.6%	100.0%	0.8
	4)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	56.3%	42.7%	1.0%	100.0%	1.3
	5)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나라	57.4%	35.6%	7.0%	100.0%	1.6
	6)기타	54.5%	9.1%	36.4%	100.0%	6.0
	전체	53.6%	43.3%	3.2%	100.0%	1.2

○ 북유럽식 사민주의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기준은 빈부격차 적고 사회복지 잘 갖추어진 나라, 반면 미국식이 북유럽식보다 더 선호되는 기준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안보와 치안 걱정 없는 나라다.

1) 경제적 풍요: 미국과 북유럽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하다.

2) 안보와 치안 문제: 인구규모 대비 재산자 숫자, 살인 사건 피해자 숫자, 미국의 빈발하는 총기 살상사고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미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 인구 10만명당 감옥 수감자 숫자는 스웨덴은 74명(2022년 1월)인 반면 미국은 505명(2020년 12월)으로 그 7배 정도에 달한다.²⁾

3) 시민들의 상호 신뢰도: ISSP의 시민간 상호신뢰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를 보면 스웨덴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신뢰도가 더 높다.

* ISSP(2014)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미국은 37.5%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은 73.7%로 그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웨덴 등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단순한 판단 조차 오류를 보이고 있다.

○ 한편 미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발전된 사회의 허상을 갖고 있다.

*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기초한 세계패권국가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런 세계패권국가의 경제규모와 군사력은 미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2)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

6. 맺음말

○ 불평등 시대 시민들의 사회의식 분석 결과 의식의 양면성과 의식의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항쟁과 2022년 대선에서 보인 시민들의 일견 모순된 선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 불평등 사회 시민의식의 양면성: 시민들은 불평등 심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불평등 해소 위한 정부 책임 의견은 후퇴하고, 복지확대 위한 증세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복지증세 부담은 기피하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선호하면서도 평등하고 복지제도 발달된 북유럽식보다 불평등하고 복지제도 불비한 미국식을 선택한다.

* 이러한 의식의 양면성은 노동자 집단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평등 현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대안적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위력과 대항 이데올로기의 취약한 탓이라 할 수 있다.

2) 불평등 심화 시대 시민의식의 후퇴: 시민들은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수저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이행을 추진할 책임의식은 후퇴하고 있다.

* 시민들의 불평등 완화 위한 정부 책임과 재정지출 증대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 복지확대 위한 증세 부담 의향은 약화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대안사회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는 반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상승하고 있다.

* 복지증세 부담 의향이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출범후 크게 높아졌다가 사회경제개혁 정책 후퇴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은 촛불정부의 소임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바람직한 대안사회로의 이행 기대감을 낮추고 복지증세 부담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평등 가치 실종된 대선에서 불평등 심화 우려가 큰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촛불항쟁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 한국인의 85-90% 정도가 우리 사회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구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한국사회의 높은 불평등 수준을 반영한다.

○ 소득 수준 적절성 & 임금 결정 기준:

* 본인의 능력·노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2.0%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 대다수가 보상체계에 대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불만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임금수준 결정 기준으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8년에는 근무태도가 업무능력에 비해 비해 월등히 더 중요했으나 이후 근무태도의 중요성은 하락하고 업무능력의 중요성은 상승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다는 사람들은 업무능력에 비해 근무태도와 근속년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근무태도와 근속년수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저계급사회의 불공정성:

*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이 구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은 한국도 구미 국가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 추세로 인해, 예전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에 비해 열심히 일하기의 중요성이 더 컸지만, 그 격차가 꾸준히 축소되다가 2023년 현재 부유한 집안 출신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역전되며,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수저계급사회로 진입했음을 확인해 준다.

○ 상승이동 어려움과 사회질서의 불공정성:

* 시민들의 56.3%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63.8%가 가난이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의 3배 가까이 된다.

* 시민들이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고 가난이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정상 도달 위해 부패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회는 불균등하고 사회질서는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작은 정부론의 확산과 소득불평등 해소 정부역할:

* 정부 정책영역들에서 재정지출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액 의견보다 높지만, 재정책대 의견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작은 정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은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이 또한 작은 정부론의 확산 효과라 할 수 있다.

○ 복지증세 필요성, 그러나 증세부담 거부 의향:

* 사회복지 확대 위한 증세 필요성 의견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어 2023년 현재 다수 의견이 되었다. 하지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은 촛불항쟁과 정권교체로 2017년 70%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정책 후퇴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증세부담 반대 의견은 63.7%에 달한다.

* 이렇게 복지증세 납부 의향이 낮은 것은 복지증세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증세부담 거부 의견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 복지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56.6%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을 표명하는 양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정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물질적 부담 증대를 기피하며 여전히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탓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사회 나아갈 방향: 대안사회의 기준 & 경험적 준거의 불일치;

* 시민 절반이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으로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를 꼽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준다.

*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를 꼽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비율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비율의 격차는 13%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이 구미

선진국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복지가 저발달된 나라임에도 42.2%가 미국식을 선택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 북유럽식 대비 미국식의 상대적 선호도는 경제적 풍요, 안보와 치안, 상호 신뢰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풍요는 1인당 GDP 기준으로 봐도 미국과 북유럽은 비슷한 수준이고, 안보와 치안은 인구 규모 대비 재산자 숫자에서 미국이 스웨덴의 7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훨씬더 불안정한 사회이고, 시민들의 상호 신뢰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스웨덴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더 높다.
- * 시민들이 북유럽식에 비해 미국식을 더 선호하는 것은 미국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강대국 선망 증상, 그리고 북유럽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 탓으로 해석된다.

○ 종사상 지위 집단별 불평등 관련 의식: 사업주와 노동자 대척점;

- * 종사상 지위 집단별 불평등 관련 의식은 불평등 체제에서 상위 소득집단에 해당하는 유고용 사업주와 관리전문직 집단과 하위 소득집단에 해당하는 무고용 자영업자와 노동자로 양극화되어 있다. 특히제로섬 게임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 집단이 불평등 체제의 수혜자와 피해자로서 사회의식의 대척점을 구성하고 있다.
- * 세대간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동과 세대내 상승이동 가능성에서 사업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자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 대조된다.
- * 임금결정 기준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근속연수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월등히 더 중시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에 비해 양자 모두 노동자보다 훨씬더 중요시하는 가운데 근무태도보다 업무능력을 더 중시하여 생산성과 이윤 중심 이해관계를 잘 표출하고 있다.
- * 성공 요인의 두 가지, 열심히 일하기와 부유한 집안 출신 가운데 사업주는 열심히 일하기를, 노동자는 부유한 집안출신을 훨씬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다.

○ 사업주와 노동자의 복지증세와 대안사회 입장;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충?

- * 사업주와 노동자는 세대간·세대내 사회적 이동, 임금결정 기준, 성공 요인 등 다양한 불평등 관련 쟁점들에서 대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증세와 대안사회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 * 복지증세 의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하지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강한 의향을 보여준다. 사업주는 복지 부담을 사업체에서 정부로 넘기려는 의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조세부담 재정 능력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누진적 세율과 소득재분배의 잠재적 수혜자임에도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세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물질적 부담을 기피하는 의향 탓으로 해석된다.
- *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에서 노동자는 사업주에 비해 평등과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더 높아서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바람직한 사회 발전방향에서는 북유럽식과 미국식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자가 구체적 대안사회의 내용과 이행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리적 전략을 내면화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표②

성평등과 안전보건에 대한 시민 의식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본 장에서는 성평등과 안전보건 영역에 대해 조사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분위기에 대한 인식, 성평등 성취 정도에 대한 인식,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성평등 영역은 이러한 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해 주로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인식 정도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평등 관련 주제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집단별로는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갤럽의 성평등 인식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2년 ISSP에서 실시된 성역할 인식조사, 그리고 2003년 계급의식조사에서 사용된 몇 개의 문항을 이번 설문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성평등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인식은 어떤 수준인지 비교하였다.

안전보건 관련 설문은 일상에서의 위험 인식, 일터에서의 안전, 산업재해 인식, 중대재해처벌법, 야간노동에 대한 인식,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인식,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안전보건 관련 문항들은 한국사회종합조사(KGSS)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한 일상 생활에서의 위험 요소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새로 생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안전보건 관련 조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첫 번째의 전국민의 상대 인식 조사는 데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터 환경, 코로나의 영향, 의료공공성 강화, 야간노동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I. 성평등 영역

1. 우리사회의 성평등 분위기

우리 사회의 성평등 분위기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행동 등 전반적 분위기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였다. 남성에게 우호적(항상 남성에게 더 우호적+남성에게 우호적인 편)이라는 대답은 66.2%, 남녀 동등하다는 대답은 15.9%, 그리고 여성에게 우호적(여성에게 우호적인 편+항상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대답은 17.9%였다. 이를 2019년 갤럽의 성평등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이번 조사와 2019년 조사의 한국 표본, 그리고 전세계 평균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대답이 2019년의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녀동등하다는 대답은 2019년의 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성평등 분위기

인식	비율
1) 항상 남성에게 더 우호적	15.8
2) 남성에게 우호적인 편	50.4
3) 남녀 동등	15.9
4) 여성에게 우호적인 편	15.4
5) 항상 여성에게 더 우호적	2.5
계	100

인식	한국-2023	한국-2019 ³⁾	전세계 평균-2019
남성에게 더 우호적	66.2	44	48
남녀동등	15.9	37	27
여성에게 더 우호적	17.9	18	17
계	100.0		

이를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성평등 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대답은 남성들의 경우 48%, 여성들은 82.5%로 두 집단간의 비율 차이가 34.5%p였고, 남녀 동등하다는 대답은 남성의 경우 22.7%, 여성 9.8%,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남성 29.3%, 여성 7.7%로 두 집단간 차이가 20%p 이상이다. 2019년 갤럽의 조사와 비교해볼 때 이러한 집단 간 인식의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훨씬 더 크며, 특히 여성들의 불평등 인식이 2019년의 조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성평등 분위가 성별 비교

	한국-2023		한국-2019		전세계 평균-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성에게 더 우호적	48.0	82.5	36	53	41	55
남녀동등	22.7	9.8	39	36	31	24
여성에게 더 우호적	29.3	7.7	25	11	21	13
계	100.0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집단에서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견해가 2019년 조사보다 이번 조사에서 더 높다. 28-34세 연령집단의 경우 57.7%, 35-54세 연령집단은 69.3%,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69.4%로 2019년 한국 자료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세계 평균보다도 유의하게 높다. 반면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견해는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견해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

3) 2019년의 갤럽 조사 결과는 모름/무응답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가 100%가 아님을 주의할 것.

반적으로 2019년 조사에 비해 남녀동등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 성평등 분위가 연령 집단별 비교

	한국-2023			한국-2019			전세계 평균-2019		
	18~34	35~54	55 ~	18~34	35~54	55~	18~34	35~54	55~
남성에게 더 우호적	57.7	69.3	69.4	42	46	44	44	47	55
남녀동등	21.3	12.5	15.7	37	37	37	29	28	24
여성에게 더 우호적	21.1	18.2	14.9	20	16	18	19	17	14

이를 연령 집단별과 성별로 분해를 해보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성과 남성 간 성평등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연령 집단별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10-20대 연령집단의 경우 남성 25.8%, 여성 79.8%, 30대 연령집단의 경우 남성은 30.6%, 여성은 86.8%, 40대의 경우 남성은 47.2%, 여성은 88.7%, 50대는 남성 54.8% 여성은 83.9%, 60대 이상은 남성 64.2% 여성 74.4% 였다. 각 연령 집단별로 남녀 인식 격차를 보면, 30대가 56.2%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54%로 그 다음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우리 사회가 항상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50대에서는 이 비율이 10-20대 남성들보다 2배 가량, 그리고 60대 이상 남성들에서는 2.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항상 남성에게 더 우호적	남성에게 우호적인 편	남녀동등	여성에게 우호적인 편	항상 여성에게 더 우호적	계
20대 ⁴⁾	남성	2.3	23.5	31.9	32.3	10.0	100
	여성	22.1	57.7	16.0	4.3	0.0	100
30대	남성	2.9	27.7	28.5	32.6	8.4	100
	여성	31.9	54.9	8.2	4.5	0.4	100
40대	남성	8.4	38.8	23.4	23.2	6.1	100
	여성	25.2	63.5	6.2	5.1	0.0	100
50대	남성	9.2	45.6	15.2	25.8	4.3	100
	여성	23.0	60.9	6.8	9.3	0.0	100
60대 이상	남성	6.7	57.5	19.3	15.4	1.1	100
	여성	22.1	52.3	11.5	14.1	0.0	100

4) 조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19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20대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영역별 성평등 성취 인식

우리나라에서 일터, 정치, 가정, 이 세 영역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느끼는 영역은 가정, 일터, 정치 순이었다. 우선 일터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확실히 이루어짐+어느정도 이루어짐)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56.5%였고, 남성은 67.5% 여성은 46.6%가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여 성별 간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21%p).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성별과 연령별로 성평등을 각각 분석했을 때 남성에서는 40대가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연령집단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일터에서 성평등 성취 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59.7%),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일터에서의 성평등이 성취되었다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아 (각각 39.7%, 38.6%) 남성들에 비해 큰 연령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 -일터에서

일터에서		영역별 성평등 성취				
		확실히 이루어짐	어느정도 이루어짐	성평등 성취됨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전체		7.5	49.0	56.5	38.0	5.5
성별	남성	9.7	57.8	67.5	29.0	3.5
	여성	5.6	41.0	46.6	46.1	7.3
연령별	20대	9.5	42.1	51.5	39.2	9.3
	30대	9.4	41.0	50.5	42.1	7.5
	40대	7.5	54.2	61.7	32.8	5.5
	50대	7.6	44.7	52.4	44.1	3.5
	60대 이상	4.8	59.0	63.8	33.1	3.1
성*연령						
남성	20대	16.4	50.4	66.8	27.5	5.7
	30대	12.8	55.5	68.3	29.1	2.7
	40대	9.9	62.4	72.3	24.4	3.4
	50대	10.0	54.7	64.7	33.4	2.0
	60대 이상	4.0	62.6	66.6	29.9	3.5
여성	20대	4.1	35.7	39.7	48.3	12.0
	30대	7.2	31.4	38.6	50.8	10.6
	40대	5.4	46.8	52.2	40.3	7.5
	50대	5.9	37.5	43.4	51.9	4.7
	60대 이상	5.8	53.9	59.7	37.8	2.5

정치영역은 세 가지 영역 중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37.5%의 응답자가 정치영역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역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성은 47.8%, 여성은 28.2%가 정치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43.2%)을 보였고, 20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나타난다(32.2%). 연령별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터에서의 성평등 성취 인식과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는데, 남성 집단에서의 편차보다 여성들 내에서 연령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남성은 10대, 20대 30대가 53-55% 가량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40대, 50대, 60대의 경우 34%-35%의 비율을 보이지만 20대는 14.7%, 30대는 2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치에서의 성평등 성취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 -정치에서

정치에서		영역별 성평등 성취				
		확실히 이뤄짐	어느정도 이뤄짐	성평등 성취됨	별로 이뤄지지 않음	전혀 이뤄지지 않음
전체		7.2	30.2	37.5	48.1	14.5
성별	남성	9.8	38.1	47.8	43.8	8.4
	여성	5.0	23.2	28.2	51.9	19.9
연령별	20대	8.2	24.0	32.2	45.3	22.5
	30대	12.2	22.5	34.7	43.3	21.9
	40대	6.9	36.3	43.2	41.8	15.0
	50대	5.9	32.4	38.3	51.3	10.4
	60대 이상	5.2	33.2	38.4	54.7	6.9
성*연령						
남성	20대	13.7	41.1	54.8	39.2	6.0
	30대	14.2	40.9	55.1	35.7	9.1
	40대	7.2	46.3	53.4	38.4	8.2
	50대	10.8	31.3	42.1	47.6	10.3
	60대 이상	6.6	34.7	41.3	50.3	8.4
여성	20대	3.9	10.8	14.7	50.0	35.3
	30대	10.9	10.2	21.1	48.4	30.5
	40대	6.7	27.4	34.1	44.9	21.1
	50대	2.3	33.2	35.5	54.0	10.5
	60대 이상	3.1	31.1	34.2	61.0	4.9

가정에서의 성평등은 세 영역 중 성취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전체의 65%의 응답자들이 가정에서의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 인식 격차는 일터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은 76%, 여성은 55.2%, 격차는 21.1%), 여성 내의 연령 집단별 편차는 남성들의 연령별 편차뿐 아니라, 앞선 두 영역에서의 편차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집단에서 가정내의 성평등 성취 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60대(80.3%)이고 가장 낮은 연령집단은 30대(56.2%)로 두 집단간 비율의 격차는 24.1%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 집단은 73.3%가 가정내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 여성이 4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두 집단 간 격차는 32.4%이다.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가정에서		영역별 성평등 성취				
		확실히 이뤄짐	어느정도 이뤄짐	성평등 성취됨	별로 이뤄지지 않음	전혀 이뤄지지 않음
전체		11.1	53.9	65.0	28.4	6.6
성별	남성	15.7	60.3	76.0	21.7	2.4
	여성	7.0	48.2	55.2	34.4	10.4
연령별	20대	9.6	49.5	59.2	29.7	11.1
	30대	8.9	47.3	56.2	33.7	10.1
	40대	8.7	50.6	59.2	32.4	8.4
	50대	13.1	53.8	66.9	29.7	3.4
	60대 이상	13.6	63.8	77.4	20.1	2.5
성*연령						
남성	20대	16.3	49.2	65.5	28.3	6.2
	30대	14.1	58.8	72.9	25.3	1.8
	40대	16.6	63.1	79.7	17.1	3.3
	50대	16.8	60.9	77.7	21.8	0.6
	60대 이상	14.7	65.6	80.3	18.9	0.8
여성	20대	4.5	49.8	54.3	30.8	14.9
	30대	5.4	39.7	45.1	39.2	15.7
	40대	1.5	39.4	40.9	46.2	13.0
	50대	10.4	48.7	59.1	35.4	5.5
	60대 이상	11.9	61.3	73.3	21.8	5.0

2018, 2019, 2020년에 실시된 영역별 성평등 성취 여부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 참여국 전체의 수준에서 직장, 정치, 가정의 영역 전반에 걸쳐 시간이 지날수록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제외하고는 정치 영역이나 가정의 영역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를 갤럽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		일터에서	정치에서	가정에서
1) 확실히 이뤄짐	전체	7.5	7.2	11.1
	남	9.7	9.8	15.7
	여	5.6	5.0	7.0
2) 어느정도 이뤄짐	전체	49.0	30.2	53.9
	남	57.8	38.1	60.3
	여	41.0	23.2	48.2
3) 별로 이뤄지지 않음	전체	38.0	48.1	28.4
	남	29.0	43.8	21.7
	여	46.1	51.9	34.4
4) 전혀 이뤄지지 않음	전체	5.5	14.5	6.6
	남	3.5	8.4	2.4
	여	7.3	19.9	10.4

● 영역별 성평등 성취 여부 인식 요약 - 최근 3년 조사 참여국 평균 vs 한국

성취 응답 기준		일터·직장			정치			가정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조사 참여국 평균	전체	60%	60%	54%	51%	48%	46%	71%	72%	66%
	성별 남성	65%	64%	59%	56%	53%	51%	74%	75%	70%
	여성	56%	56%	49%	47%	43%	42%	68%	70%	63%
한국	전체	61%	61%	58%	48%	42%	45%	73%	73%	74%
	성별 남성	67%	67%	64%	54%	44%	52%	79%	76%	81%
	여성	56%	56%	51%	43%	40%	37%	67%	70%	67%

* Gallup 리포트, 성평등(Gender Equality) 관련 인식 조사(WIN World Survey 다국가 비교조사 포함)

3.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1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취업과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 두 가지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여성의 취업과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영역에서 취업한 어머니도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약 60%가량이 찬성하였고 반대 의견은 13%이었다. 이는 성별로 다소 다른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 견해에 대해 남성들은 54.9% 여성들은 64.8%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두 번째,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59.7%, 남성은 58.7%, 여성은 61.4%의 사람들이 찬성의견을 보여 전반적으로 성별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세 번째,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은 어려워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의 54.5%, 남성 52.8%였고 여성 56.3%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네 번째,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23.9%가 찬성을 했고 남성은 26.2% 남성은 21.8%의 응답자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전업주부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 만큼 가치있는 일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들은 70.5%라는 높은 찬성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여성들의 72.7%가 이 견해에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수입활동, 여성을 가정용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12.7%가 찬성을 하여 여섯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고정적 성역할 인식을 보이는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찬성이 9%, 남성은 16.9%였다.

이 외에도 “가사와 육아에 남자도 여자와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2003년 계급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이 의견에 대해 적극 동의 혹은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90%였는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94.9%로 약 5%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03	2023	2003-23 증감
1) 적극 동의	41.2	39.0	-2.2
2) 대체로 동의	48.8	55.9	7.1
3) 대체로 반대	8.7	4.5	-4.2
4) 적극 반대	1.3	.6	-0.7
합계		100.0	
적극/대체로 동의	90	94.9	4.9
적극/대체로 반대	10	5.1	-4.9
합계		100	

전반적으로 가정 내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여섯 가지 항목에서의 견해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몇 가지 항목에서는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 등 극단적 응답의 성별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한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간에 다소 찬성 의견은 비슷하지만, 매우 찬성 응답은 남성이 14.4%, 여성이 22%였고, 부부간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다소 반대 응답이 성별집단간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매우 반대 의견은 여성이 47%가량으로 남성보다(21.3%)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가정 내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

영역	1) 취업한 어머니도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는다			3)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은 어려워진다		
		남	여		남	여		남	여
1) 매우 찬성	18.4	14.4	22.0	12.2	9.8	14.3	10.5	8.9	12.1
2) 다소 찬성	41.7	40.5	42.8	47.5	47.9	47.1	44.0	43.9	44.2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26.8	31.3	22.8	25.1	27.8	22.7	27.5	30.9	24.5
4) 다소 반대	12.1	12.8	11.5	11.9	11.6	12.2	13.4	13.3	13.4
5) 매우 반대	1.0	1.0	1.0	3.3	2.8	3.8	4.5	3.1	5.8

	4)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다			5) 전업주부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 가치있는 일이다			6) 남성은 수입활동, 여자는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남	여		남	여		남	여
1) 매우 찬성	5.1	5.9	4.4	30.6	25.7	35.0	2.3	3.2	1.5
2) 다소 찬성	18.8	20.3	17.4	39.8	42.2	37.7	10.4	13.7	7.5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30.4	38.6	23.1	22.2	25.9	18.9	26.8	34.4	20.0
4) 다소 반대	27.2	26.0	28.2	5.6	5.1	6.0	25.6	27.3	24.1
5) 매우 반대	18.5	9.3	26.8	1.8	1.1	2.4	34.8	21.3	46.9

이번 조사를 ISSP 2012년 성역할 인식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취업한 어머니와 취학전 자녀 문제(2)에 대한 고정관념은 2012년 조사에 비해 약 8%p 가량이 낮아졌고, 전일제 취업 여성과 가정생활(3)은 6%p 가량, 여성의 역할 욕구(4)에 대한 고정적 인식은 15.8%p, 부부간 성역할 분담(6)은 20.6%p 가량 낮아졌다. 특히, 여성의 역할 욕구와 부부간 성역할 분담에 대한 찬성 비율은 비율의 측면에서도 각각 40%, 62% 감소해 이 두 항목에 대한 고정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2012년에 비해 고정적 인식이 다소 커졌고 (7%p 정도), 전업주부의 가치에 대한 항목 역시 고정적 인식이 8%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2년 세계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 취업한 어머니와 취학전 자녀 문제, 전일제 취업여성과 가정생활,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고정적 성역할 인식은 세계 평균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ISSP 2012 gender role survey 와 비교

	1)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 관계			2)취업한 어머니와 취학전 자녀문제			3)전일제 취업여성과 가정생활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매우찬성	28.0	29.5	18.4	10.4	22.1	12.2	9.9	18.3	10.5
다소찬성	41.3	37.2	41.7	33.7	45.5	47.5	30.2	42.1	44.0
찬성/반대아님	10.8	11.8	26.8	17.8	15.8	25.1	18.0	18.2	27.5
다소반대	16.4	18.5	12.1	26.4	12.2	11.9	28.3	16.3	13.4
매우반대	3.6	3.0	1.0	11.7	4.3	3.3	13.7	5.2	4.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여성의 역할 욕구			5)전업주부의 가치			6)부부간 성역할 분담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세계ISSP	한국ISSP	한국2023
매우찬성	12.2	16.9	5.1	12.9	44.8	30.6	10.4	11.4	2.3
다소찬성	32.7	22.8	18.8	33.1	33.5	39.8	21.4	21.9	10.4
찬성/반대아님	21.5	20.7	30.4	23.2	14.7	22.2	18.5	19.8	26.8
다소반대	22.5	25.9	27.2	22.6	5.4	5.6	29.8	29.8	25.6
매우반대	11.0	13.7	18.5	8.3	1.6	1.8	19.9	17.1	3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2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대한 조사는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의 우선 채용 문제, 부부간 소득 수준, 여성 상사와 남성 부하직원 문제, 여성들의 성평등 주장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5.2%가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75%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 견해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구분 해서 살펴보면, 남성은 약 30%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20%가량만 그렇다고 대답하여 해당 견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는 견해에 대해 33.4%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66.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7.9% 남성의 경우 39.6%가 각각 그렇다는 견해를 보여 앞선 견해보다 인식에 있어 남녀 간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세 번째,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5.4%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11.9%가, 남성은 19.1%가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51.3%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도 36.3%, 남성의 68.2%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앞선 세 가지의 견해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여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성별

	1)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이 먼저 채용이 되어야 함			2)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음			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함			4)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21.5	13.7	28.6	23.0	16.2	29.0	30.8	23.1	37.6	12.1	3.1	20.2
2) 그렇지 않다	53.3	55.6	51.2	43.6	44.2	43.0	53.9	57.8	50.4	36.6	28.7	43.6
3) 그렇다	21.3	26.2	17.0	30.2	35.9	25.1	13.4	16.9	10.2	36.7	42.8	31.3
4) 매우 그렇다	3.9	4.6	3.3	3.2	3.7	2.8	2.0	2.2	1.7	14.6	25.4	5.0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에 대해 남녀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 우선 채용 원칙에 대해서 여성들은 20대의 8.1%가 동의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동의 의견이 연령 집단 전반적으로 29%에서 35%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 여성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높은 연령집단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20대에서는 25.5%의 남성들이 이 견해에 동의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50대와 60대에서는 45% 가까운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우 40대까지는 1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동의를 하고 있으나 50대에서는 22.2%, 60대 이상에서는 23.8%까지 그 비율이 증가한다. 남성들의 경우는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13.3%에서 22%가량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대 여성들이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 비율은 높아진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전반적으로 71%에서 75.5%의 동의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59.3%가 이에 동의하여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성별,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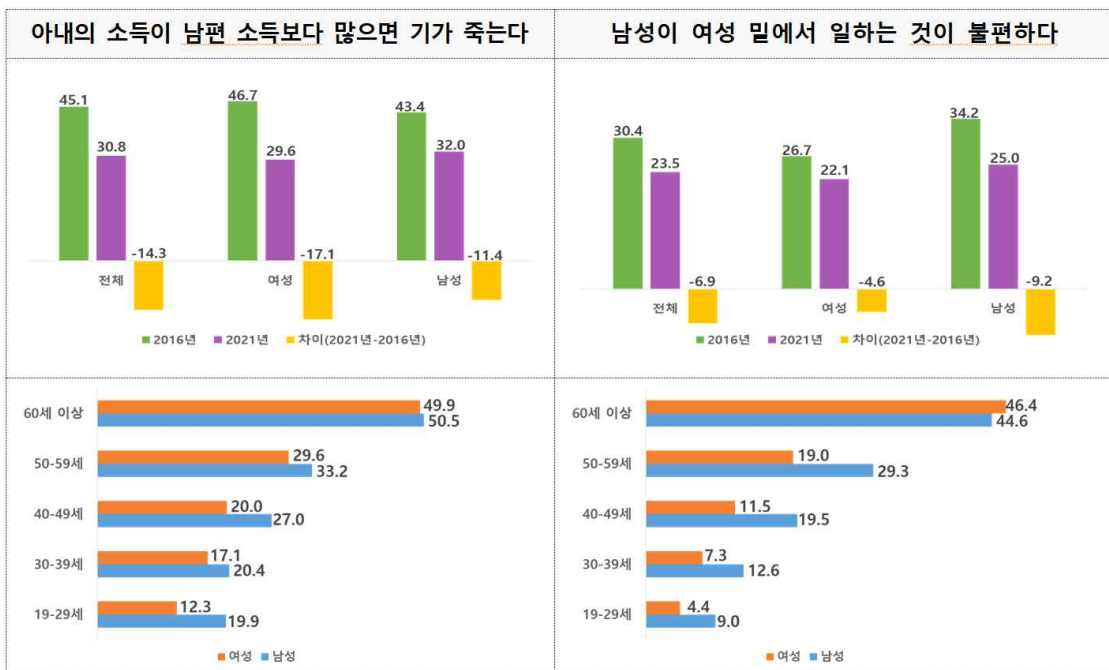
	인식	1)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이 먼저 채용이 되어야 함		2)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음		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함		4)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대	전혀 그렇지 않다	50.8	19.6	61.0	34.7	68.4	41.2	41.6	5.6
	그렇지 않다	41.0	51.4	23.3	39.9	24.8	45.5	33.4	23.0
	그렇다	6.2	24.3	13.0	24.6	5.3	12.4	22.6	37.6
	매우 그렇다	1.9	4.7	2.7	0.9	1.5	0.9	2.4	33.8
30대	전혀 그렇지 않다	42.0	18.8	44.1	20.9	55.7	34.6	33.6	3.1
	그렇지 않다	42.9	50.8	41.2	45.4	34.9	42.8	36.9	21.5
	그렇다	13.4	27.2	14.5	29.1	5.9	20.3	25.3	41.4
	매우 그렇다	1.7	3.2	0.3	4.6	3.5	2.3	4.2	34.1
40대	전혀 그렇지 않다	21.4	12.6	25.7	15.4	34.9	21.8	15.7	2.1
	그렇지 않다	60.3	58.5	47.7	42.0	58.2	58.4	46.2	26.1
	그렇다	16.5	24.1	23.5	35.9	6.5	15.8	33.1	44.3
	매우 그렇다	1.8	4.8	3.1	6.7	0.4	4.0	5.0	27.5
50대	전혀 그렇지 않다	17.3	9.2	11.0	9.8	19.6	15.2	6.5	2.3
	그렇지 않다	56.1	55.8	54.4	45.0	67.7	62.6	55.1	26.7
	그렇다	23.9	29.0	31.2	42.7	11.2	20.3	33.2	47.9
	매우 그렇다	2.7	6.1	3.4	2.5	1.4	1.9	5.3	23.1
60대~	전혀 그렇지 않다	13.6	11.8	7.0	7.8	13.6	13.6	6.8	2.9
	그렇지 않다	54.7	58.0	47.9	47.1	62.6	67.6	43.5	37.9
	그렇다	23.6	26.3	41.3	40.9	21.6	16.7	41.7	42.2
	매우 그렇다	8.2	3.9	3.9	4.2	2.2	2.1	8.0	17.1

여가부에서 실시한 2016년,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 우선 채용 원칙 문제(1)와 평등에 대한 과도한 주장(4) 항목은 2021년에 조사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의 이 두 가지 항목은 2016년 자료만 비교 가능하며,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은 2016년과 2021년 모두 조사되어 세 시점 모두 비교가 가능하다. 2016년 실업률과 남성 우선 채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26%로 이번 조사는 이보다 0.8%p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3.2%p 가량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1.2%p가 증가하여 감소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 격차 역시 2016년 5.6%p에서 이번 조사는 10% 가량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상황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들의 성평등에 대한 과도한 주장에 대한 찬성 정도는 2016년 46.3%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5%p 가량 증가하였는데, 여성들의 찬성 비율은 두 시기가 비슷한 반면, 남성들의 찬성 비율이 13%p

가량 증가하여 두 시기간 증가 비율은 이 견해에 대한 남성들의 찬성 비율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와 남편의 소득격차에 대한 견해는 여가부의 2021년 조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6년의 수치에 비해서는 모두 낮은 비율을 보여, 부부간 소득 격차에 대한 고정적 성역할 인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견해는 2021년과 2016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어 직장에서의 성역할 고정 관념 역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년과 2021



5.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군가산점제 부활, 남성 육아휴직, 여성할당제, 남성교원할당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병역의무를 마친 7,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자의 63.4%가 찬성하였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92.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네 가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찬성 태도를 보였다. 정치·경제·사회·고용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는 62.2%가 찬성한다 응답하였으며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시 30% 범위에서 남자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남성교원할당제는 63%의 응답자들이 찬성을 하였다. 그러나 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는 남성의 73.8%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의 14%만이 이에 찬성하고 있었고,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남성의 48.9%, 여성의 74.1%가 찬성하여 네 가지 정책 중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제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교원할당제는 남성과 여성의 66.2%와 67.7%가 각각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두 성별집단 모두 비슷한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정책이었고,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의 90.7% 여성의 95.3%가 찬성을 하여 이 역시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군가산점제 부활			남성 육아휴직			여성할당제			남성교원할당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매우 반대한다	9.5	남	5.2	1.0	남	1.6	10.2	남	16.8	8.6	남	9.6
		여	13.3		여	0.5		여	4.3		여	7.6
2) 반대한다	27.2	남	21.0	5.9	남	7.7	27.6	남	34.3	24.4	남	24.1
		여	32.7		여	4.3		여	21.6		여	24.7
3) 찬성한다	45.0	남	45.6	56.9	남	59.1	50.2	남	43.2	53.1	남	51.2
		여	44.4		여	54.9		여	56.5		여	54.8
4) 매우 찬성한다	18.4	남	28.2	36.3	남	31.6	12.0	남	5.7	13.9	남	15.0
		여	9.6		여	40.4		여	17.6		여	12.9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찬성율을 보이며, 남성들의 경우는 반대로 30대에서 83%로 찬성하는 사람이 쯤 높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67.1%의 남성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어 여성들과 연령별 분포에 있어 차이가 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우 전 연령에서 고루 찬성의견이 높아 94%에서 96%까지 찬성하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여성들과 비슷한 수준의 찬성율을 보이고 20대와 30대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할당제 역시 여성들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62.7%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나머지 연령 집단에서는 30%-40% 가량의 비교적 낮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성 교원할당제는 남녀 모두 여성 40대를 제외하고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집단별, 성별

	인식	군가산점제 부활		남성 육아휴직		여성할당제		남성 교원할당제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대	매우 반대	24.6	6.2	0.3	3.7	3.6	27.5	15.0	20.4
	반대한다	29.7	19.5	3.2	8.5	17.5	35.9	22.9	24.6
	찬성한다	37.3	35.7	33.0	40.2	49.3	28.6	47.6	40.4
	매우 찬성	8.5	38.5	63.5	47.6	29.6	8.0	14.4	14.6
30대	매우 반대	23.4	6.4	2.2	1.6	5.8	28.2	14.5	16.5
	반대한다	37.2	10.5	2.3	13.9	18.1	35.5	18.1	26.6
	찬성한다	31.1	48.2	36.3	39.5	50.0	31.1	48.7	40.1
	매우 찬성	8.3	34.8	59.3	45.0	26.2	5.2	18.7	16.8
40대	매우 반대	13.7	2.8	0.4	0.5	3.2	16.4	4.0	7.6
	반대한다	43.3	22.0	5.1	10.8	21.2	34.7	33.0	23.0
	찬성한다	33.8	49.4	60.8	57.2	62.6	42.5	53.4	50.5
	매우 찬성	9.3	25.9	33.8	31.5	12.9	6.4	9.6	18.9
50대	매우 반대	4.4	5.3	0.0	0.8	6.1	14.5	3.9	4.2
	반대한다	32.3	17.6	4.7	7.5	19.5	39.0	25.2	22.1
	찬성한다	52.1	47.4	69.5	67.3	64.5	41.8	61.0	64.0
	매우 찬성	11.2	29.7	25.8	24.4	9.9	4.7	10.0	9.7
60대~	매우 반대	3.3	5.6	0.1	1.3	2.7	7.8	2.1	5.2
	반대한다	23.2	27.3	5.7	3.3	32.1	29.5	23.5	24.8
	찬성한다	63.5	47.1	70.3	73.8	54.0	57.9	61.1	54.2
	매우 찬성	10.0	19.9	23.9	21.6	11.3	4.8	13.4	15.8

6.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1) 여가부 폐지에 대한 태도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은 여가부 폐지와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로 측정되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6%가 찬성한다고 대답하여(매우 찬성한다+찬성한다) 반대 의견(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연령별 태도를 살펴보면, 우선 20대의 61.5%, 30대의 61.9%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60대(54%), 50대(44.6%) 순으로 찬성율이 높았으며, 40대는 49.1%로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 집단별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성별 격차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20대 남성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8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로 79.8%였으며,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58.6%로 가장 높은데 이는 60대 남성의 찬성 비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30대 집단이

49.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20대 여성의 경우는 41.1%로 세 번째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여성 연령 집단은 40대였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 집단과 비교해보면, 20대의 경우 남녀 찬성률 격차가 가장 크며(46.7%), 그 다음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연령x성별 여가부 폐지에 대한 태도

	10-20대			30대			40대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매우 반대	16.1	3.1	26.1	13.5	2.9	20.6	12.5	10.6	14.3
반대	22.4	9.1	32.7	24.7	17.2	29.6	38.4	24.7	50.6
찬성	27.6	24.5	30.0	32.0	25.5	36.2	27.4	31.4	23.8
매우 찬성	33.9	63.3	11.1	29.9	54.3	13.6	21.7	33.3	11.3
계	100								

	50대			60대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매우 반대	20.2	18.6	21.3	18.5	22.9	12.2
반대	35.3	27.8	40.8	27.5	25.6	30.3
찬성	26.4	25.0	27.4	38.0	31.1	47.9
매우찬성	18.2	28.6	10.6	16.0	20.5	9.7
계	100					

2)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인식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귀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못할 것이다와 잘 못할 것이다 두 가지의 응답이 모두 69.5%로 긍정적인 답변(30.5%)보다 훨씬 많았다. 여성의 경우는 27.5%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34%가 잘할 것이다 응답하여 남성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체	성별	
		남	여
매우 못할 것이다	28.6	남	29.7
		여	27.7
잘 못할 것이다	40.9	남	36.4
		여	44.9
잘할 것이다	26.9	남	28.1
		여	25.9
매우 잘할 것이다	3.6	남	5.9
		여	1.6
계	100		

연령별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60대에서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대에서의 긍정적 대답은 29.6%로 연령 집단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50대가 29.2%, 30대가 22.3% 그 다음 순위였다. 40대가 18.6%로 가장 낮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연령별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대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Total
매우 못할 것이다	31.0	30.7	35.8	26.9	21.8	28.6
잘 못할 것이다	39.4	47.0	45.6	43.9	32.4	40.9
잘할 것이다	24.0	19.3	16.8	26.4	41.4	26.9
매우 잘할 것이다	5.6	3.0	1.8	2.8	4.4	3.6
	100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연령별 기대 분포는 성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60대의 경우 남성이 40.1%, 여성이 54.1%가 잘할 것이라 응답하여 여성들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의 경우 남성의 43.1%, 그리고 여성의 19.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연령 집단 중 가장 큰 성별 격차(23.8%p)를 보인 집단이었다. 30대의 경우 남성의 31%, 그리고 여성의 16.6%가 잘할 것이라 대답하여 긍정적 응답의 성별 격차는 14.4%p로 나타났고, 40대는 남성 22%, 여성 15.6%가 잘할 것이라 대답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긍정적 응답율, 그리고 적은 성별 차이를 보였다. 5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7%, 29.6%의 긍정적 응답을 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성별 차이가 가장 적다.

연령별, 성별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대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Total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못할 것이다	21.9	38.0	25.2	34.3	38.5	33.3	33.3	22.3	28.4	12.3	29.7	27.7
잘 못할 것이다	35.0	42.8	43.9	49.1	39.5	51.1	38.1	48.2	31.4	33.7	36.4	44.9
잘할 것이다	31.1	18.6	26.8	14.4	18.8	15.0	25.8	26.9	33.7	52.5	28.1	25.9
매우 잘할 것이다	12.0	0.7	4.2	2.2	3.2	0.6	2.9	2.7	6.4	1.6	5.9	1.6
	100		100		100		100		100		100	

이번 조사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3년 계급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2003년 조사에서는 이 견해에 적극 동의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83.1%였으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65.1%로 감소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두 시기 간 18%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젠더 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이 되어 왔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 역할의 측면에서는 후퇴한 측면이 있다. 정부 정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작은정부론이 성차별

해소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교육, 보건, 돌봄 재정 증액의 문제에서 여성은 서비스의 일차적 수혜자로서, 일자리 취업 가능성에서도 남성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이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치안에 대한 재정지출 증액 의견이 좀 더 강했고, 환경 재정지출은 남녀 동등하게 강한 찬성을 보인다.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

	2003	2023	2003-23 증감
1) 적극 동의	33.6	14.6	-19
2) 대체로 동의	49.5	50.5	1
3) 대체로 반대	13.6	28.2	14.6
4) 적극 반대	3.3	6.7	3.4
합계	100.0		
적극/대체로 동의	83.1	65.1	-18
적극/대체로 반대	16.9	34.9	18
합계	100		

II. 안전보건 영역

1.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인식

일상에서의 위험 유형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관련 위험, 전염병 감염(신종플루, 조류독감, 코로나), 폭력 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등), 사고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폭발, 낙상, 화학물질),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노후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등) 위험의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사람들이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노후 불안으로 조사된 사람들의 93.2%가 노후 불안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절대적으로 위험하다+매우 위험하다+대체로 위험하다), 64.7%의 응답자들은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⁵⁾ 그 다음은 정신건강으로 전체의 90.8%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56.6%의 응답자들은 정신건강 위험이 절대적 혹은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유형들에 대한 불안감도 전반적으로 80% 수준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사고 및 산업재해와 폭력범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각각 42.7%, 42.6%로 정신건강과 노후불안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인지하는 수준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각 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응답자들을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로 나누어 살펴 볼 때 절대적으로 위험하다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정규직 노동자 집단이었다. 자연재해 관련 위험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36.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무고용 자영업자(35.2%), 비정규직 노동자(32%) 순이었다. 전염병 감염에 대한 위험 역시 정규직 노동자가 43.6%가 위험하다고 대답하였고 무고용 자영업자의 경우 40%가 위험하다고 대답하여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폭력 범죄로부터의 위험성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45.2%가 위험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44%, 무고용 자영업자가 41.3% 순이었다. 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위험에 있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47.8%가 위험하다고 인지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무고용 자영업자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노후 불안의 위험은 정규직 노동자-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비정규직 노동자-무고용 자영업자-관리전문직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의 위험은 정규직 노동자-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비정규직 노동자, 무고용 자영업자-관리전문직 순으로 노후불안의 위험과 집단별 위험 인지도 순서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5) 조사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의 재해 유형에 대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대체로 위험하다 이 세 단계에서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위험인지에 대한 변별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와 매우 위험하다 두 가지 척도를 위험하다로 분류하기로 한다.

일상에서의 위험 유형별 태도 (중사상 지위별)

중사상 지위	인식	자연 재해	전염병 감염	폭력 범죄	사고 및 산업재해	정신 건강	노후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	
전체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2	10.8	13.1	9.7	20.0	24.4	11.2	
	2) 매우 위험하다	25.7	28.6	29.5	33.0	36.6	40.3	27.8	
	3) 대체로 위험하다	51.5	44.7	38.8	44.2	34.2	28.5	43.2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5	15.4	17.2	12.6	9.0	6.5	16.8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2	0.5	1.4	0.6	0.2	0.2	1.1	
유고용 사용자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6	12.7	12.2	10.7	19.3	23.9	8.6	
	2) 매우 위험하다	23.4	24.4	18.8	26.9	35.5	43.2	32.5	
	3) 대체로 위험하다	55.3	44.7	46.7	49.2	35.0	24.4	41.1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3.7	17.8	21.3	12.7	8.6	7.1	16.8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0	0.5	1.0	0.5	1.5	1.5	1.0	
무고용 자영업자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6.6	8.5	10.8	4.7	16.4	23.9	8.9	
	2) 매우 위험하다	28.6	31.5	29.1	36.6	36.2	39.0	30.5	
	3) 대체로 위험하다	49.8	47.4	41.8	41.8	34.3	30.1	47.9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0	12.7	18.3	16.9	12.7	7.0	12.7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0	0.0	0.0	0.0	0.5	0.0	0.0	
관리전문직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4	7.5	8.9	5.3	17.7	21.0	11.0	
	2) 매우 위험하다	17.2	30.3	23.2	33.2	36.6	40.4	25.3	
	3) 대체로 위험하다	60.3	46.9	44.9	45.4	34.7	31.9	42.7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1	14.7	22.5	16.2	10.9	6.2	20.9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0	0.5	0.6	0.0	0.0	0.5	0.0	
임금노동자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2	11.3	13.9	10.8	20.8	24.8	11.7	
	2) 매우 위험하다	26.0	28.2	30.6	32.7	36.7	40.4	27.4	
	3) 대체로 위험하다	50.9	44.1	37.6	44.2	34.1	28.2	42.5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7	15.8	16.4	11.6	8.3	6.5	17.1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2	0.6	1.7	0.7	0.2	0.1	1.3	
	정규직 노동자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10.7	13.7	16.7	12.2	26.4	34.2	15.3
		2) 매우 위험하다	25.5	29.9	28.5	35.6	37.7	36.6	30.5
		3) 대체로 위험하다	48.0	42.7	40.0	40.7	28.3	25.2	38.6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4	12.9	13.9	10.8	7.5	3.8	14.0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4	0.8	0.9	0.7	0.1	0.3	1.7
비정규직 노동자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5.8	10.3	12.6	10.1	18.4	20.8	10.1	
	2) 매우 위험하다	26.2	27.4	31.4	31.5	36.2	42.1	26.1	
	3) 대체로 위험하다	52.1	44.7	36.5	45.8	36.5	29.5	44.2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9	17.1	17.4	12.0	8.6	7.6	18.4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1	0.5	2.0	0.7	0.2	0.0	1.2	

연령 집단별 각 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 인식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정신건강 위해요소가 가장 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72%), 그 다음 요소가 노후불안(65.3%)으로 나타

났다. 30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20대와 달리 노후 불안(77.6%)을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지하고 있고, 정신건강 위해 요소는(69.7%)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0, 50대 역시 노후불안-정신건강 위해요소 순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50대의 경우 정신 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위협 인식도가 크게 떨어져 (47%)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 집단에서 갖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 인식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노후 불안이 54.1%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나타났고, 다른 재해 유형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30-40% 가량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대답하였다.

재해별로 연령집단별 위협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전염병 감염을 가장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연령집단은 3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로 나타났으며,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20대-30대 순으로, 사고 및 산업재해는 30-20대 순으로 위상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은 2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서는 30대-40대 순이었다.

일상에서의 위협 유형별 태도 (연령별)

연령	인식	자연 재해	전염병 감염	폭력 범죄	사고 및 산업재해	정신 건강	노후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
20대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5.1	11.9	18.8	13.1	31.2	26.4	12.6
	2) 매우 위험하다	18.9	26.1	26.4	32.5	40.8	38.9	25.5
	3) 대체로 위험하다	53.2	42.0	30.9	42.0	21.6	26.9	42.5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22.4	18.3	20.6	11.4	6.3	7.6	16.2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4	1.7	3.3	1.1	0.1	0.3	3.2
30대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12.4	17.3	17.3	14.8	32.0	36.8	14.3
	2) 매우 위험하다	27.1	29.7	29.1	34.6	37.7	40.8	32.6
	3) 대체로 위험하다	44.2	36.0	38.1	39.2	23.7	18.4	36.0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6.4	16.6	13.7	10.5	5.7	3.3	16.3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0	0.5	1.9	0.9	0.9	0.7	0.8
40대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4	10.0	10.9	8.0	19.6	35.0	13.6
	2) 매우 위험하다	28.5	32.4	31.9	33.8	45.2	39.0	31.7
	3) 대체로 위험하다	52.5	44.3	40.9	44.5	30.5	22.3	41.7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1.4	13.0	15.2	12.7	4.7	3.7	11.8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2	0.3	1.1	1.1	0.0	0.0	1.3
50대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5.8	9.2	9.6	6.7	12.1	16.4	9.7
	2) 매우 위험하다	27.2	26.7	30.4	35.1	34.9	44.4	25.8
	3) 대체로 위험하다	51.7	48.8	44.3	43.4	44.9	35.3	48.5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5.3	15.3	15.6	14.6	7.7	4.0	15.9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0	0.0	0.1	0.2	0.4	0.1	0.1
60대 이상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1	8.2	10.9	8.0	11.7	15.5	7.9
	2) 매우 위험하다	27.0	29.0	29.8	30.1	27.6	38.6	25.9
	3) 대체로 위험하다	53.1	48.4	39.4	49.2	43.3	34.0	43.9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2.6	14.3	19.1	12.7	17.4	11.9	22.2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1	0.1	1.0	0.0	0.0	0.0	0.2

일상에서의 재해 유형에 대한 위협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노후 불안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남성 60.3%, 여성 68.7%), 그 다음으로 정신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남성 49.8%와 여성 62.7%).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52.1%가 폭력범죄에 대해 위협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고, 사고 및 산업재해(46.8%)-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42.3%)에 대한 위협을 순서대로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해 세 번째로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38.1%), 전염병 감염(36.6%)-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35.3%)를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해에 대한 위협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위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남성의 32%가 위협하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들의 경우 52.1%가 위협하다고 대답하여 재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성별 인식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위협 인식이 큰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45.8%, 여성의 62.7%가 스트레스나 우울이 위협하다고 인식하여 두 집단 간에 12.9%p 차이가 있었다.

일상에서의 위협 유형별 태도 (성별)

성별	인식	자연 재해	전염병 감염	폭력 범죄	사고 및 산업재해	정신 건강	노후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
남성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6.4	10.7	8.5	8.0	14.9	22.9	9.2
	2) 매우 위험하다	23.8	25.9	23.5	30.1	34.9	37.4	26.1
	3) 대체로 위험하다	51.4	45.2	42.6	46.3	36.0	31.5	44.3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8.1	17.7	23.2	14.6	14.0	7.9	19.0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3	0.5	2.2	1.0	0.1	0.2	1.5
여성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7.9	10.8	17.2	11.2	24.7	25.8	13.0
	2) 매우 위험하다	27.3	31.0	34.9	35.7	38.0	42.9	29.3
	3) 대체로 위험하다	51.6	44.3	35.5	42.2	32.5	25.9	42.2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13.2	13.4	11.8	10.8	4.5	5.3	14.9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0.1	0.5	0.6	0.2	0.3	0.1	0.7
여성-남성	위험하다	5.1	5.2	20.1	8.8	12.9	8.4	7.0

2. 일터에서의 안전

우리나라 일터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혹은 열악한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49.8%로 양호하다 혹은 매우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11.5%)보다 훨씬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일터를 열악하다고 제일 크게 인식하는 집단은 임금노동자(51.2%)였다. 임금노동자들 중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55.8%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49.6%가 우리나라의 일터를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들이 우리나라의 일터 환경에 대해 가장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41.7%)

우리나라 일터 전반에 대한 인식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1) 매우 열악하다	3.6	5.2	2.7	8.9	8.9	8.9		7.9
2) 열악한 편이다	38.1	39.4	43.8	42.3	45.9	40.7		41.9
3) 보통	43.7	43.2	40.9	37.7	35.2	38.7		38.7
4) 양호하다	14.7	11.3	10.9	11.0	10.0	11.4		11.1
5) 매우 좋다	0.0	0.9	1.7	0.2	0.0	0.3		0.4
총계	100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59%,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9.2%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임금노동자들의 60.4%가 일터에서의 위험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62.3%가 비정규직은 59.7%가 노동자들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위험수준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관리전문직으로 57.9%가 위험하다고 대답하였고,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들이 우리나라 일터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1) 매우 위험하다	6.6	5.6	4.3	9.1	9.8	8.8		8.3
2) 위험한 편이다	43.2	47.0	53.6	51.3	52.5	50.9		50.7
3) 보통	38.1	37.1	32.3	30.7	30.9	30.7		31.8
4) 안전한 편이다	12.2	9.4	9.9	8.7	6.5	9.7		9.0
5) 매우 안전하다	0.0	0.9	0.0	0.1	0.3	0.0		0.2
총계	100							

3. 산업재해 인식

산업재해에 대한 의견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고용주들의 안전보건조치 문제,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산업재해의 필수불가결성 네 가지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무고용 자영업자의 84.1%, 임금노동자의 83.4%가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들이 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74.6%). 두 번째, 산업재해는 고용주들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5%의 대상자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고용주들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이라는 점에 대해 높

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이 견해에 대해 87.3%가 동의한다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임금노동자들(85%)이었다. 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관리 전문직과 고용인이 있는 사업주들은 무고용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각각 83.2%와 79.2%가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든 종사상 지위 집단들이 산업재해를 고용주들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69.9%로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보다(30.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고용주들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산재가 발생한다는 의견보다는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 견해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집단은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였고(78.2%), 그 다음은 무고용 자영업자(71.9%), 관리전문직(71.3%), 임금노동자(69.2%) 순이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전반적인 동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네 번째, 산업재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므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2.3%만이 동의하여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무고용 자영업자로, 다른 집단들의 경우 20%에서 25% 가량의 비율을 보인 반면, 무고용 자영업자는 17.4%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의견

산업재해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1.9	1.4	1.3	1.6	1.2	1.5	
	동의하지 않음	21.8	14.1	26.5	15.3	15.0	15.4	16.1	
	동의함	59.4	65.3	60.8	63.4	61.6	64.2	63.4	
	매우 동의함	15.2	18.8	11.2	20.0	21.8	19.2	19.1	
산업재해는 고용주들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발생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1.4	1.4	1.4	1.3	1.4	1.5	
	동의하지 않음	16.8	11.3	15.5	13.7	14.8	13.2	13.6	
	동의함	56.4	54.0	59.0	56.8	55.0	57.5	56.6	
	매우 동의함	22.8	33.3	24.2	28.2	29.0	27.9	28.4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	3.3	3.2	3.2	4.2	2.9	3.2	
	동의하지 않음	20.3	24.9	25.5	27.6	26.9	27.9	26.9	
	동의함	66.5	59.2	56.5	56.4	54.8	57.1	57.0	
	매우 동의함	11.7	12.7	14.8	12.8	14.1	12.2	12.9	
산업재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므로 감수해야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4	26.3	27.3	26.6	29.5	25.4	26.6	
	동의하지 않음	50.3	56.3	52.3	50.2	46.3	51.9	51.1	
	동의함	20.8	14.6	17.0	21.0	20.3	21.3	19.9	
	매우 동의함	4.6	2.8	3.4	2.2	3.9	1.5	2.4	

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자의 81.5%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라고 응답하여 동의하지 않는 비율(18.5%)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임금노동자가 82.6%의 비율로 이 견해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무고용 자영업자가 그 다음으로 80.8%의 응답자들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와 관리전문직은 각각 75.2%, 73.6%가 중재법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일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85%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종사상 지위별 집단 중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의견은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임금노동자들과(84%) 무고용 자영업자(84.6%)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었다.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들과(72.6%) 관리전문직(79%)은 종사상 지위 집단 중 중재법 강화의 필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지만, 중재법 강화에 동의하는 절대적 비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중재법은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36.3%의 응답자들만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여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훨씬 적다. 고용인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53.8%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위 집단들은 전반적으로 약 33%에서 40% 정도의 응답자들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 전문직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중재법은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8	1.7	3.5	3.4	3.5	3.3	
	동의하지 않음	21.3	16.4	24.8	14.0	11.6	15.0	15.2	
	동의함	57.9	65.3	59.2	66.0	71.1	63.8	65.2	
	매우 동의함	17.3	15.5	14.4	16.6	13.9	17.8	16.3	
안전을 위해 중재법은 더 강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2.8	2.2	2.7	2.4	2.8	2.7	
	동의하지 않음	23.4	12.7	18.8	14.9	13.6	15.4	15.1	
	동의함	51.8	57.8	52.8	55.1	57.8	54.0	55.2	
	매우 동의함	20.8	26.8	26.2	27.3	26.2	27.7	27.0	
중재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	10.8	13.3	12.2	14.3	11.3	12.0	
	동의하지 않음	37.1	54.5	45.4	52.5	51.2	53.0	51.8	
	동의함	45.7	31.0	33.6	30.1	28.9	30.7	31.0	
	매우 동의함	8.1	3.8	7.8	5.2	5.6	5.1	5.3	
중재법의 처벌 수위는 완화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	22.5	23.1	21.0	25.1	19.2	21.1	
	동의하지 않음	50.8	51.6	48.4	51.6	50.7	52.0	51.3	
	동의함	27.9	20.7	23.3	21.7	19.8	22.5	21.9	
	매우 동의함	7.6	5.2	5.2	5.8	4.4	6.3	5.7	

마지막으로 중재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서 앞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4%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고용 자영업자의 74.1%, 그리고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75.8%가 처벌 수위의 완화에 대해 반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 견해를 보였으며, 고용인 있는 사용자의 64.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반대 견해를 보였다.

5. 야간노동

야간노동은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끼치므로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6%가 동의하여 야간 노동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견해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사람들은 임금노동자로 47.1%가 이 견해에 동의함 혹은 매우 동의함이라 응답하였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8.3%가 이에 동의하였고,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사람들은 무고용 자영업자로 32.4%만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야간노동/야간영업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8.7%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견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집단은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78.7%)와 무고용 자영업자(73.3%)였지만, 관리전문직과 임금노동자 집단들도 각각 69.2%와 67.7%가 이에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병원, 경찰, 소방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야간노동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40.2%만이 동의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특히 임금노동자들의 경우에는 43.9%가 동의하였지만,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와 무고용 자영업자의 경우네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26.4%와 27.3%에 그쳐 다른 집단에 비해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노동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33.7%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반대 의견(67.2%)보다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자의 31.6%만이 동의한 반면, 고용인이 있는 사용자는 43.2%, 무고용 자영업자는 36.2%, 전문관리직은 36%가 동의한다고 대답하여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야간노동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종사상 지위별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야간노동에 대한 견해

야간노동에 대한 의견		유고용 사용자	무고용 자영업자	관리전문직	임금노동자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야간노동은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끼치므로 없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7	12.2	5.5	7.0	8.0	6.5	7.6
	동의하지 않음	52.8	55.4	53.4	45.9	47.4	45.2	47.7
	동의함	32.5	27.7	35.3	40.1	37.3	41.4	38.1
	매우 동의함	3.1	4.7	5.8	7.0	7.3	6.9	6.5
야간노동은 필수불가결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0.5	2.4	3.7	4.1	4.2	4.0	3.7
	동의하지 않음	20.8	24.4	27.3	28.3	29.9	27.6	27.5
	동의함	67.5	63.4	61.3	59.1	57.0	60.0	60.0
	매우 동의함	11.2	9.9	7.8	8.6	9.0	8.4	8.7
필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야간노동은 사라져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2	15.5	9.1	9.7	10.4	9.4	10.6
	동의하지 않음	57.4	57.3	53.1	47.4	50.1	46.2	49.2
	동의함	22.3	22.1	31.7	35.9	33.6	37.0	33.6
	매우 동의함	4.1	5.2	6.1	7.0	5.9	7.5	6.6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노동은 확대되어야 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8.6	8.0	8.7	10.7	12.4	10.0	10.2
	동의하지 않음	48.2	55.9	55.3	57.7	54.6	59.1	57.0
	동의함	38.1	32.9	32.0	28.2	28.2	28.3	29.3
	매우 동의함	5.1	3.3	4.0	3.4	4.9	2.7	3.4

6.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인식

코로나로 인해 각각의 고용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대기업 소유주와 경영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26.8%이고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19.1%로 상당한 비율의 응답자들이 대기업 소유주와 경영인의 삶의 질이 악화된 비율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유주나 경영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을 것이라 느끼는 사람들은 55.8%로 개선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11%)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자영업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받은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7%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37.9%에 그쳐 중소기업 소유주나 경영인이 받았을 부정적인 영향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었을 것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은 81.1%로 자영업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 인식하는 집단은 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중소기업 소유주/경영인-정규직 노동자-대기업 소유주나 경영인으로 나타난다.

코로나로 인한 집단별 삶의 질의 변화 인식

	의견	비율(%)
대기업 소유주/경영인	1) 크게 악화됨	3.4
	2) 다소 악화됨	23.4
	3) 변화 없음	54.0
	4) 다소 개선됨	11.7
	5) 크게 개선됨	7.4
중소기업 소유주/경영인	1) 크게 악화됨	13.6
	2) 다소 악화됨	42.2
	3) 변화 없음	33.2
	4) 다소 개선됨	9.2
	5) 크게 개선됨	1.8
자영업자	1) 크게 악화됨	55.1
	2) 다소 악화됨	31.9
	3) 변화 없음	9.1
	4) 다소 개선됨	3.8
	5) 크게 개선됨	0.2
정규직 노동자	1) 크게 악화됨	6.6
	2) 다소 악화됨	31.3
	3) 변화 없음	55.6
	4) 다소 개선됨	5.9
	5) 크게 개선됨	0.6
비정규직 노동자	1) 크게 악화됨	35.7
	2) 다소 악화됨	45.4
	3) 변화 없음	15.5
	4) 다소 개선됨	3.1
	5) 크게 개선됨	0.4

7. 의료공공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 성별로 살펴보았다. 공공의료기관 신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5%가 동의하였고, 연령 집단 중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89.6%의 높은 비율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로 84.6%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에 가장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 연령집단은 20대였다(76.4%). 두 번째, 국립 의과대학의 일부를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공공 의사 양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2.1%의 조사대상자들이 동의를 하였으며, 공공 의료기관 신설에 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이 이 주장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낸 집단으로, 이 연령집단의 86.8%가 이 주장에 동의함 혹은 매우 동의함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85.3%의 응답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한 40대였으며,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연령집단은 74.3%가 이 주장에 동의한 20대였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에 종사상 지위별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공공의료기관 신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	3.2	1.2	1.6	1.4	1.8
	2) 동의하지 않음	21.6	19.8	14.3	16.4	9.1	15.7
	3) 동의함	62.2	58.3	63.1	63.3	72.1	64.5
	4) 매우 동의함	14.2	18.8	21.5	18.8	17.5	18.0
공공의사 양성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해야 함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3.9	4.6	1.2	3.8	0.3	2.6
	2) 동의하지 않음	21.8	18.4	13.6	11.9	13.0	15.4
	3) 동의함	57.5	56.7	59.1	61.6	59.6	59.2
	4) 매우 동의함	16.8	20.3	26.2	22.7	27.2	22.9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을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 공공의료기관 신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집단은 60대 이상 남성과 50대 남성이었고 20대 남성들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들의 경우, 연령별 찬성 비율이 86%-76% 정도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공공의사 양성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20대 남성의 동의가 가장 낮았으며, 50대 이상의 남성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79.4%에서 84.6%로 동의하고 있었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성별x연령별)

		공공의료기관 신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공공의사 양성등 보건의료인력 확충해야 함	
		여	남	여	남
20대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7	2.4	2.7	5.5
	2) 동의하지 않음	14.1	31.3	16.2	29.0
	3) 동의함	68.5	54.1	64.0	49.1
	4) 매우 동의함	15.7	12.2	17.1	16.4
30대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	4.2	2.7	7.4
	2) 동의하지 않음	19.5	20.3	17.9	19.1
	3) 동의함	58.1	58.5	59.0	53.3
	4) 매우 동의함	20.0	17.0	20.3	20.3
40대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	0.8	1.2	1.1
	2) 동의하지 않음	12.5	16.3	14.3	12.8
	3) 동의함	71.5	53.7	62.3	55.6
	4) 매우 동의함	14.6	29.2	22.3	30.5
50대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	0.7	4.9	2.4
	2) 동의하지 않음	21.7	9.1	14.2	8.7
	3) 동의함	60.9	66.5	63.7	58.8
	4) 매우 동의함	15.2	23.6	17.3	30.1
60대 이상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	2.5	0.4	0.2
	2) 동의하지 않음	14.1	5.5	15.0	11.5
	3) 동의함	75.8	69.5	62.5	57.6
	4) 매우 동의함	10.1	22.6	22.1	30.7

요약 및 결론

1. 성평등 영역

- 우리 사회의 성평등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보다 더 강한 경향이 있어 사회적인 성평등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서의 성별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인식의 격차는 이전의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보다 더 증가하였다 (2019년 17%p에서 2023년 34.5%p)
- 성평등 인식에서의 격차는 연령집단간에도 있는데, 20대와 30대에서의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커(각각 54%p, 56.2%p), 이 연령대의 젊은 남성들은 4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더 우호적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성평등 성취의 수준은 가장-일터-정치 영역 순으로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 영역 모두에서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약 20% 이상)가 있었다. 연령집단별 편차는 남성 내에서도보다 여성 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가정에서의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의 경우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40대 여성들과 30%p 이상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보인다.
- 이전의 조사와 비교할 때, 세계적 수준에서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성평등 성취 인식이 증가해왔으나, 한국은 일터를 제외한 정치와 가정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성취도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가정 내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2012년 ISSP 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의 역할 욕구와 부부간 성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어머니의 취업 문제와 가정생활, 그리고 전업주부의 가치 등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역시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식 개선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 95.3%와 남성 90.7%가 찬성을 하였고, 남성고원할당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67.7%, 남성의 66.2%가 찬성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지만, 군가산점제 부활이나 여성할당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인식 격차가 있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성별 갈등의 요소가 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20대: 61.5%, 30대: 61.9%), 40대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49.1%)을 보이는데, 20대와 30대 남성의 여가부 폐지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으며 (58.6%) 동 연령대의 남성들보다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로 볼 때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여성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54.1%로 가장 높으며, 20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 인식 격차가 가장 크고(남성 긍정: 43.1%, 여성 긍정: 19.3%), 40대에서 남녀 모두 부

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동시에 성별 격차가 적다.

- 전반적으로 젠더의식은 개선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 작은 정부론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안전보건 영역

- 응답자들이 위협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재난은 노후 불안으로 64.7%가 위협하다고 느끼며, 정신건강(56.6%), 사고 및 산업재해(53.7%), 폭력범죄(42.6%) 순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노후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노동자 다음으로 비정규직과 무고용 자영업자들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 20대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요소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노후 불안을 그 다음의 큰 위협 요소로 꼽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노후 불안이 가장 큰 위협 요소였으며,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정신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위협 인식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 위협을 인지하는 요소들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노후불안-정신건강 위해요소-폭력범죄-사고 및 산업재해 순으로 위협을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경우 노후 불안-정신 건강 위해요소-사고 및 산업재해-전염병 감염 순으로 위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남성들과 가장 큰 위협 인식 격차를 보인다(여성 52.1%, 남성 32%, 격차 20.1%).
- 우리나라의 일터 전반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인식이 양호하다는 인식보다 훨씬 높으며, 이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각 고용 지위 집단 내에서도 양호하다는 인식보다는 열악하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일터의 열악함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 산업재해가 고용주들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85%로 가장 높았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2.5%의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반면, 산업재해의 원인을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69.9%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앞의 두 가지 의견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었다. 특히 산업재해는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22.3%)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은 높은 편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81.5%가 동의하였고, 안전을 위해 중재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2.2%가 동의하였는데, 사용자와 관리전문직에서도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거나 처벌수위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사용자들의 경우에도 각각 절반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경총 등의 사용자들에 의한 인식 조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야간노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에 동의하거나 야간노동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았지만, 야간노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의료공공성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40대에서 가장 많은 찬성 의견을, 20대에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이었다. 이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20대 젊은 연령층, 특히 남성들의 박탈감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발표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들어가며

이 글은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중 기후 위기 관련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혹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행태, 신념, 의견, 실태 등을 설문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관찰하는 방법(임성호, 2021; p.317)이다. 이 글은 기후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먼저 기후위기 관련 항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고, 둘째 교차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고용 형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넷째 직급과 소득 수준에 따른 특징을 보고, 끝으로 이념 성향, 정치적 성향, 소속 계급에 따른 특징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1> 조사 설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표본설계	○ 연령, 권역별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은 경제활동 인구 비율 고려해서 표본배분 진행)
표본크기	○ 2,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2% point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본 조사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해서 조사 진행 - 온라인 패널 중 표본설계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패널을 추출해서 조사 참여 링크 발송(이메일 등) - 조사 참여 현황에 따라 부족한 표본배분 기준에 해당하는 패널에게 지속적으로 조사 링크 발송해서 조사 참여 협조 요청 - 최종 표본설계 기준에 따라 목표표본 조사 완료될 때까지 진행
조사기간	○ 2023년 02월 03일 ~ 02월 20일
조사기관	○ 엠브레인

이 글은 총 6가지 조사 영역⁶⁾ 중 ‘안전과 보건 문제’ 내용 가운데 환경, 기후, 에너지 관련 조사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과 보건 문제’ 중 ①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환경 위험, ②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③기후변화 대응 정책, ④미래 에너지 등 4가지 질문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6) 중범위 조사 영역은 ①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성, ②경제와 사회 문제, ③노동조합과 노사관계, ④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문제, ⑤성 역할과 성 평등, ⑥안전과 보건 문제 등임.

〈표2〉 분석 영역과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안전과 보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위험성/환경 위험성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 기후변화 대응 정책 -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고용형태, 직급, 노동조합 가입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학력, 혼인상태, 지지 정당, 정당 호감도, 노동조합 호감도, 정치적 성향, 소속 계급

이 글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 질문 문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분석 대상 질문 문항

	질문 문항
G1. 재해위험성	7)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협
G2. 환경 위험성	5)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7)원자력 발전소 가동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1)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비상사태이다
	2)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3)기후변화는폭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을 증가시켜 심각한 재난을 일으킨다
	4)기후변화는 감염병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5)기후변화는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6)기후변화는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1)우리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지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2)노후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3)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4)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기업들에 대한 강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5)한국의 미래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6)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7)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8)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설해야 한다
	9)신규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2. 인식조사 결과와 특징

1) 기후위기 관련 국민인식 주요 결과

(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환경 위험성’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관련 위험에 대해 시민 83.1% 동의

〈표4〉 재해 위험성(G1)에 대한 시민 인식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대체로 위험하다	소계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소계
1) 자연재해(태풍, 지진, 황사) 관련 위험	8.2	24.5	51.6	84.3	15.6	0.3	15.9
2) 전염병 감염(신종플루, 조류독감, 코로나)	11.3	29.3	44.0	84.6	14.9	0.6	15.5
3) 폭력 범죄 (강도, 살인, 성폭력 등)	13.7	27.8	40.5	82	16.8	1.2	18
4) 사고 및 산업재해 (교통사고, 폭발, 낙상, 화학물질)	10.3	33.2	43.5	87	12.6	0.5	13.1
5)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등)	21.6	36.8	32.2	90.6	9.1	0.4	9.5
6) 노후 불안	27.2	39.2	27.5	93.9	5.9	0.4	6.3
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험	12.8	28.5	41.8	83.1	15.9	1.1	1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관련 위험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노후 불안이나 정신건강 등 개인이 직면할 직접적인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가 낮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의 위험에 대해 시민 95.1% 동의, 원전 위험은 79.5% 동의

〈표5〉 환경 위험성(G2)에 대한 시민 인식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대체로 위험하다	소계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소계
1) 자동차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7.6	30.4	52.2	90.2	9.7	0.2	9.9
2) 산업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15.7	42.9	36.8	95.4	4.5	0.2	4.7
3) 농약이나 화학물질	11.8	31.3	46.9	90	9.8	0.3	10.1
4) 강, 호수, 개울에 생기는 오염	12.0	33.2	44.1	89.3	10.5	0.4	10.9
5)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34.0	37.0	24.1	95.1	4.5	0.4	4.9
6)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15.5	34.2	37.3	87	12.0	1.2	13.2
7) 원자력 발전소 가동	17.7	26.0	35.8	79.5	17.6	3.0	20.6

환경 위험성에 대해 시민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지구온난화(95.1%)와 대기오염(95.4%)에 대한 동의가 매우 높았으나, 원전 위험에 대한 동의(79.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기후위기 현상(96.5%), 원인(94.3%), 영향(96.4%)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일자리(88.5%)와 불평등(77.7%)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 낮아

〈표6〉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G3)에 대한 시민 의식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소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소계
1)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비상사태이다	37.0	35.9	23.6	96.5	3.2	0.4	3.6
2) 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24.2	39.1	31.0	94.3	5.3	0.5	5.8
3) 기후변화는 폭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을 증가시켜 심각한 재난을 일으킨다	32.7	40.1	23.6	96.4	3.5	0.3	3.8
4) 기후변화는 감염병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28.4	38.7	26.4	93.5	6.2	0.5	6.7
5) 기후변화는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	33.2	35.4	88.5	10.8	0.8	11.6
6) 기후변화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15.9	26.4	35.4	77.7	19.6	2.9	22.5

국내외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위기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린피스(2020)⁷⁾ 조사에서 86.9%, 녹색연합(2021)⁸⁾ 조사에서 97.7%, 문화체육관광부(2022)⁹⁾ 조사에서 96.2% 등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WIN¹⁰⁾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다국가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질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시민 1,500명 중 93%가 동의했다. 이는 39개국 평균인 86%는 물론이고 일본(75%), 중국(70%), 미국(72%)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갤럽, 2022)¹¹⁾.

2021년 녹색연합 조사에서도 기후변화와 일자리 영향 관련 동의(82.1%), 불평등 심화(75.4%)로 나타났다. 물론 응답자의 3/4, 혹은 4/5 이상의 동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 평가로 시민 인식 수준이 낮다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기후위기 인식 수준에 비추어 기상이변이나 건강위협 이외의 사회경제적 위협으로까지의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의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조사기간 2020년 10월 16일~19일, 웹조사, 지역/성/연령 기준 비례할당추출 1,000명

8) 조사기간 2021년 8월 12일~19일, 온라인 조사, 만14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

9) 조사기간 2022년 10월 12일~17일, 온라인 조사,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607명

10) 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

11) 조사기간 2021년 11월5~28일, 면접조사원 인터뷰,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

(3) 기후변화 대응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90.4%), 배출책임 기업 규제(95%), 재생가능에너지(92.9%),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92.3%) 정책에 대한 동의 매우 높아

〈표7〉 기후변화 대응 정책(G4)에 대한 시민 의식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소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소계
1)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을 지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14.8	32.3	43.3	90.4	8.9	0.9	9.8
2)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13.6	28.9	43.8	86.3	12.7	1.1	13.8
3)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12.6	30.4	45.1	88.1	10.6	1.5	12.1
4)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기업들에 대한 강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24.0	40.3	30.7	95	4.5	0.6	5.1
5)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역점을 두어야 한다	28.6	38.6	25.7	92.9	6.0	1.3	7.3
6)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19.5	38.3	34.5	92.3	6.9	1.0	7.9
7)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14.7	24.3	35.9	74.9	19.8	5.4	25.2
8)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	7.8	17.5	32.7	58	30.6	11.6	42.2
9)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	6.3	14.9	28.3	49.5	26.7	23.9	50.6

현재 우리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을 지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 8월 녹색연합-갤럽 조사에서도 93.3%가, 2020년 그린피스-KBS 조사에서는 85.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었다. 시민들은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데 절대적인 동의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녹색연합-갤럽 조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기업에 강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해 87.9%가 동의했다. 또한 2021년 WIN의 “WWS 다국가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조사 대상 국가 39개국 중 1위(83%)였다. 시민들은 일관되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개인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기업에 대한 규제에 절대적인 동의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92.9% 동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는 것에 절대적 동의 의사를 밝혔다(92.3%). 비록 ‘중장기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시민 대부분은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규 건설 중단(86.3%)과 기후 취약계층 보호(88.1%)에 대한 동의도 높게 나타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동의 수준(86.3%)이 높았다. 2021년 녹색연합-갤럽 조사에서도 ‘빠른 석탄발전 중단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83.3%가 동의했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79.5%가 동의했다. 한편 2020년 그린피스-KBS 조사에서 기후변화 정책 중 ‘석탄발전소 퇴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6.8%였다. 시민들의 80~90%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 꾸준히 동의하고 있어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 수준(88.1%)이 매우 높았다. 2021년 녹색연합-갤럽 조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 중 ‘재난 대비 강화 및 취약계층 안전 보장 정책 시행’에 대해 91.8%가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전의 안전 위협에 동의(74.9%)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58%) 동의 수준 높아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74.9%)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58%가 동의했고,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49.5%)이 동의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시민들은 친환경적이지 않고(60.6%), 고비용(54.8%)이라고 응답했으나, 고효율(80.7%)이라고 응답했다.

후쿠시마 핵사고(2011), 원전비리 사건(2013), 밀양 송전탑 사건 등으로 고탈핵 여론¹²⁾이 고조되었으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탈석탄 정책에 대한 지지와 단기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 주목, 그리고 정권교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반전되었다. 이는 탈석탄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대응 정책으로 원전을, 중장기적 방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이데올로기가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국은 64%가 핵발전소 신규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하는 의견은 30%(아사히신문, 2011.5.)

(4) 미래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 연료(29.2%), 원자력(16.7%) 순으로 꼽아

〈표 8〉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에 대한 시민 의식

	한국 (2023)		ISSP 환경 조사 (2010)				
	빈도	퍼센트	한국	독일	스페인	미국	스웨덴
석탄, 석유, 천연가스	88	4.4%	12.1%	7.7%	4.5%	13.8%	.7%
원자력	334	16.7%	13.2%	5.5%	9.7%	12.1%	25.0%
태양력, 풍력, 수력	930	46.5%	69.6%	80.1%	77.7%	53.0%	70.4%
곡물로 만든 연료	60	3.0%	4.9%	5.0%	7.3%	4.9%	3.1%
쓰레기 재생 연료	583	29.2%				13.8%	
기타	5	0.2%	.3%	1.7%	.8%	2.3%	.7%
합계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 연료(29.2%), 원자력(16.7%), 화석에너지(4.4%), 곡물 연료(3%) 순으로 응답했다. 앞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관련 질문이었던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에 대해 92.9%의 시민이 동의하였다. 다만 여러 에너지원 중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8.7%로 가장 높았고,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의 응답 비중이 21.1%에 불과했다.

2010년 ISSP 환경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태양광·풍력·수력의 비중이 낮아지고 ‘쓰레기 재생 연료’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또한 화석에너지 선호가 크게 떨어지고, 원자력이 다소 늘었다. 13년 사이의 인식 변화 요인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앞의 기후변화 인식 조사결과와 연관해 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징

(1) 지역별 특징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환경 위협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1)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비상사태이다					전체
	1)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 매우 동의한다	3) 대체로 동의한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서울	빈도 149 % 39.3%	123 32.5%	89 23.5%	16 4.2%	2 .5%	379 100.0%
2) 경기/인천	빈도 231 % 36.3%	255 40.0%	126 19.8%	19 3.0%	6 .9%	637 100.0%
3)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빈도 66 % 32.4%	79 38.7%	54 26.5%	5 2.5%	0 0.0%	204 100.0%
4) 경북권(대구/경북)	빈도 63 % 32.3%	61 31.3%	62 31.8%	8 4.1%	1 .5%	195 100.0%
5)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빈도 109 % 35.9%	112 36.8%	70 23.0%	7 2.3%	6 2.0%	304 100.0%
6)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빈도 63 % 34.4%	64 35.0%	46 25.1%	10 5.5%	0 0.0%	183 100.0%
7) 강원/제주	빈도 41 % 42.3%	40 41.2%	15 15.5%	1 1.0%	0 0.0%	97 100.0%
전체	빈도 722 % 36.1%	734 36.7%	462 23.1%	66 3.3%	15 .8%	1999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지역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2)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체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 매우 위험하다	3) 대체로 위험하다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1) 서울	빈도 38 % 10.1%	108 28.6%	170 45.0%	59 15.6%	3 .8%	378 100.0%
2) 경기/인천	빈도 83 % 13.0%	175 27.4%	282 44.2%	88 13.8%	10 1.6%	638 100.0%
3)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빈도 32 % 15.7%	55 27.0%	93 45.6%	23 11.3%	1 .5%	204 100.0%
4) 경북권(대구/경북)	빈도 22 % 11.2%	55 28.1%	86 43.9%	26 13.3%	7 3.6%	196 100.0%
5)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빈도 36 % 11.8%	92 30.1%	138 45.1%	35 11.4%	5 1.6%	306 100.0%
6)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빈도 26 % 14.1%	47 25.5%	90 48.9%	21 11.4%	0 0.0%	184 100.0%
7) 강원/제주	빈도 21 % 21.6%	26 26.8%	39 40.2%	9 9.3%	2 2.1%	97 100.0%
전체	빈도 258 % 12.9%	558 27.9%	898 44.8%	261 13.0%	28 1.4%	2003 100.0%

미래 에너지에 대한 지역간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원자력에 대해 경북권은 24.0%로 평균(16.7%)을 상회하였고, 전라권은 8.2%로 낮게 나타났다.

(2) 성별 특징

환경 위험성 문항 중 90% 이상의 응답자가 기후변화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응답에서 여성(38.6%)과 남성(24.2%), '별로/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여성(3.2%)과 남성(8.6%) 간의 차이가 컸다.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2. 환경 위험성_5)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1) 여성	빈도 %	407 38.6%	410 38.9%	203 19.3%	32 3.0%	2 .2%	1054 100.0%
2) 남성	빈도 %	229 24.2%	355 37.5%	281 29.7%	71 7.5%	10 1.1%	946 100.0%
전체	빈도 %	636 31.8%	765 38.3%	484 24.2%	103 5.2%	12 .6%	2000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서도 절대적 동의 비율에서 여남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비슷한 패턴은 이어진다.

다만 기후변화와 일자리(G3 5)와 기후변화와 사회불평등 심화(G3 6)와 관련 응답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항목에 비해 절대적 동의 비중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별로/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5) 기후변화는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여성	빈도 %	208 19.7%	368 34.9%	351 33.3%	121 11.5%	7 .7%	1055 100.0%
2) 남성	빈도 %	147 15.6%	319 33.8%	357 37.8%	111 11.7%	11 1.2%	945 100.0%
전체	빈도 %	355 17.8%	687 34.4%	708 35.4%	232 11.6%	18 .9%	2000 100.0%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6) 기후변화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여성	빈도 %	154 14.6%	302 28.6%	355 33.6%	216 20.5%	29 2.7%	1056 100.0%
2) 남성	빈도 %	107 11.3%	269 28.5%	355 37.6%	185 19.6%	29 3.1%	945 100.0%
전체	빈도 %	261 13.0%	571 28.5%	710 35.5%	401 20.0%	58 2.9%	2001 100.0%

특징적인 것으로 재생에너지(G4 5), 원전 위협(G4 7), 신규원전 건설(G4 8) 등과 관련,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G4 9)'하는 것에 대해 남성의 60.1%가 동의한 것에 반해, 여성의 63.8%는 별로/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7)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여성	빈도 %	167 15.8%	286 27.1%	406 38.5%	177 16.8%	19 1.8%	1055 100.0%
2) 남성	빈도 %	110 11.7%	206 21.8%	319 33.8%	206 21.8%	103 10.9%	944 100.0%
전체	빈도 %	277 13.9%	492 24.6%	725 36.3%	383 19.2%	122 6.1%	1999 100.0%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8)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여성	빈도 %	55 5.2%	123 11.7%	357 33.8%	419 39.7%	101 9.6%	1055 100.0%
2) 남성	빈도 %	109 11.5%	209 22.1%	303 32.0%	219 23.2%	106 11.2%	946 100.0%
전체	빈도 %	164 8.2%	332 16.6%	660 33.0%	638 31.9%	207 10.3%	2001 100.0%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9)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여성	빈도 %	39 3.7%	103 9.8%	240 22.7%	397 37.6%	276 26.2%	1055 100.0%
2) 남성	빈도 %	90 9.5%	172 18.2%	305 32.3%	189 20.0%	188 19.9%	944 100.0%
전체	빈도 %	129 6.5%	275 13.8%	545 27.3%	586 29.3%	464 23.2%	1999 100.0%

미래 에너지(G5)에 대해 남성은 재생에너지(50.1%)와 원자력(27.1%)을 꼽는데 반해, 여성은 쓰레기 재생연료(40.8%)와 재생에너지(43.3%)를 꼽았다.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전체
		1)석탄, 석유, 천연가스	2)원자력	3)태양력, 풍력, 수력	4)곡물로 만든 연료	5)쓰레기 재생 연료	6) 기타	
1) 여성	빈도 %	50 4.7%	78 7.4%	457 43.3%	39 3.7%	431 40.8%	1 .1%	1056 100.0%
2) 남성	빈도 %	38 4.0%	256 27.1%	473 50.1%	21 2.2%	153 16.2%	4 .4%	945 100.0%
전체	빈도 %	88 4.4%	334 16.7%	930 46.5%	60 3.0%	584 29.2%	5 .2%	2001 100.0%

(3) 연령별 특징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환경 위험성에 대해서는 30~40대의 동의가 평균치에 비해 높았고, 10~20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원전에 대해서는 30대의 위험 감수성이 높았고, 50~60대는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여 '별로/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A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G2. 환경 위험성_7)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1) 만18-29세	빈도 69 16.8%	110 26.8%	152 37.0%	55 13.4%	25 6.1%	411 100.0%
2) 만30-39세	빈도 63 23.0%	84 30.7%	89 32.5%	33 12.0%	5 1.8%	274 100.0%
3) 만40-49세	빈도 71 19.3%	112 30.4%	141 38.3%	37 10.1%	7 1.9%	368 100.0%
4) 만50-59세	빈도 68 15.0%	113 24.9%	160 35.3%	104 23.0%	8 1.8%	453 100.0%
5) 만60-69세	빈도 69 13.9%	86 17.3%	196 39.5%	115 23.2%	30 6.0%	496 100.0%
전체	빈도 340 17.0%	505 25.2%	738 36.9%	344 17.2%	75 3.7%	2002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G3)에 대해서 대체로 40대의 '절대/매우 동의한다'는 비중이 평균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0~20대(87.7%)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 일자리(G3 5)'에 대해서는 10~20대의 동의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G4)에서도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는데, 30~40대에서 절대/매우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래 에너지(G5)와 관련해서는 40세 미만에서는 쓰레기 재생연료가, 40세 이상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10~20대에서 석탄,석유 응답이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원자력 응답 비중이 높았다.

A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전체
	1)석탄, 석유, 천연가스	2) 원자력	3)태양력, 풍력, 수력	4)곡물로 만든 연료	5)쓰레기 재생 연료	6) 기타	
1) 만18-29세	빈도 42 10.3%	70 17.1%	130 31.8%	22 5.4%	144 35.2%	1 .2%	409 100.0%
2) 만30-39세	빈도 17 6.2%	40 14.6%	103 37.6%	10 3.6%	102 37.2%	2 .7%	274 100.0%
3) 만40-49세	빈도 14 3.8%	34 9.2%	182 49.5%	9 2.4%	128 34.8%	1 .3%	368 100.0%
4) 만50-59세	빈도 9 2.0%	77 17.0%	245 54.1%	12 2.6%	109 24.1%	1 .2%	453 100.0%
5) 만60-69세	빈도 7 1.4%	112 22.5%	270 54.3%	8 1.6%	100 20.1%	0 0.0%	497 100.0%
전체	빈도 89 4.4%	333 16.6%	930 46.5%	61 3.0%	583 29.1%	5 .2%	2001 100.0%

3) 고용형태에 따른 특징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후위기의 재해/환경 위험성과 관련한 답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5. 귀하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G1. 재해 위험성_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험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정규직 빈도 %	82 14.4%	167 29.2%	229 40.1%	85 14.9%	8 1.4%	571 100.0%
비정규직	65 16.2%	111 27.6%	159 39.6%	63 15.7%	4 1.0%	402 100.0%
전체 빈도 %	147 15.1%	278 28.6%	388 39.9%	148 15.2%	12 1.2%	973 100.0%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과 관련한 답변에서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5. 귀하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2) 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정규직 빈도 %	152 26.7%	226 39.6%	155 27.2%	33 5.8%	4 .7%	570 100.0%
비정규직	96 23.8%	152 37.7%	135 33.5%	19 4.7%	1 .2%	403 100.0%
전체 빈도 %	248 25.5%	378 38.8%	290 29.8%	52 5.3%	5 .5%	973 100.0%

기후위기의 대응 정책과 관련한 답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5. 귀하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2)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정규직 빈도 %	79 13.9%	164 28.8%	245 43.0%	76 13.3%	6 1.1%	570 100.0%
비정규직	51 12.7%	118 29.4%	180 44.8%	49 12.2%	4 1.0%	402 100.0%
전체 빈도 %	130 13.4%	282 29.0%	425 43.7%	125 12.9%	10 1.0%	972 100.0%

미래 에너지(G5)와 관련한 답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특징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일자리 위협'에 대한 응답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8. 귀하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G1. 재해 위험성_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험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1) 그렇다	빈도 %	22 13.2%	55 32.9%	64 38.3%	21 12.6%	5 3.0%	167 100.0%
2) 아니다		125 15.5%	223 27.7%	324 40.2%	127 15.8%	7 .9%	806 100.0%
전체	빈도 %	147 15.1%	278 28.6%	388 39.9%	148 15.2%	12 1.2%	973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과 관련한 응답도 노조 조합원 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조합원의 10.2%는 별로/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비조합원은 4.9%였다.

A8. 귀하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2) 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 그렇다	빈도 %	43 25.7%	68 40.7%	39 23.4%	15 9.0%	2 1.2%	167 100.0%
2) 아니다		205 25.5%	310 38.5%	251 31.2%	36 4.5%	3 .4%	805 100.0%
전체	빈도 %	248 25.5%	378 38.9%	290 29.8%	51 5.2%	5 .5%	972 100.0%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응답에서 노조원은 19.3%가 '원자력'을 꼽은 반면, 비조합원은 14.4%였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조합원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8. 귀하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전체
		1)석탄, 석유, 천연가스	2) 원자력	3)태양력, 풍력, 수력	4)곡물로 만든 연료	5)쓰레기 재생 연료	6) 기타	
1) 그렇다	빈도 %	11 6.6%	32 19.3%	74 44.6%	6 3.6%	42 25.3%	1 .6%	166 100.0%
2) 아니다	빈도 %	41 5.1%	116 14.4%	358 44.4%	23 2.9%	264 32.8%	4 .5%	806 100.0%
전체	빈도 %	52 5.3%	148 15.2%	432 44.4%	29 3.0%	306 31.5%	5 .5%	972 100.0%

4) 직급과 소득 수준에 따른 특징

(1) 직급에 따른 특징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응답은 변별력이 없었던 것에 비해, 직급에 따른 응답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위험성(G1 7)에 대해 상위관리급(대표, 임원, 부서의 장, 공장장 등)은 '별로/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응답이 20.3%에 달해 평균(16.3%)를 상회한 반면, 일반사원급(실무담당,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은 15.1%로 평균 아래였다.** 상위관리자급에 비해 일반사원급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A6.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급은 무엇입니까?		G1. 재해 위험성_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험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상위관리자급	빈도 %	6 10.2%	17 28.8%	24 40.7%	12 20.3%	0 0.0%	59 100.0%
중간관리자급	빈도 %	40 15.3%	71 27.1%	103 39.3%	45 17.2%	3 1.1%	262 100.0%
일반사원급	빈도 %	102 15.8%	190 29.4%	256 39.6%	90 13.9%	8 1.2%	646 100.0%
기타	빈도 %	0 0.0%	1 16.7%	4 66.7%	0 0.0%	1 16.7%	6 100.0%
전체	빈도 %	148 15.2%	279 28.7%	387 39.8%	147 15.1%	12 1.2%	973 100.0%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험성(G2 5)에 대해서는 직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원전 위험성(G2 7)에 대해서 상위관리자급의 31%가 별로/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답해 평균치(18.2%)를 크게 상회하였다.**

A6.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급은 무엇입니까?		G2. 환경 위험성_7)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상위관리자급	빈도 %	12 20.7%	13 22.4%	15 25.9%	17 29.3%	1 1.7%	58 100.0%
중간관리자급	빈도 %	47 17.9%	73 27.8%	90 34.2%	46 17.5%	7 2.7%	263 100.0%
일반사원급	빈도 %	115 17.8%	186 28.8%	239 37.1%	89 13.8%	16 2.5%	645 100.0%
기타	빈도 %	0 0.0%	2 33.3%	3 50.0%	1 16.7%	0 0.0%	6 100.0%
전체	빈도 %	174 17.9%	274 28.2%	347 35.7%	153 15.7%	24 2.5%	972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G3)에 대한 직급별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G3 3)과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G3 6)에 대해 상위관리자급에서 평균값보다 6% 이상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A6.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급은 무엇입니까?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6) 기후변화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G3. 기후변화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상위관리자급	빈도 %	10 16.9%	12 20.3%	21 35.6%	15 25.4%	1 1.7%	59 100.0%
중간관리자급	빈도 %	52 19.8%	63 24.0%	91 34.7%	46 17.6%	10 3.8%	262 100.0%
일반사원급	빈도 %	117 18.1%	161 25.0%	228 35.3%	120 18.6%	19 2.9%	645 100.0%
기타	빈도 %	1 16.7%	0 0.0%	3 50.0%	2 33.3%	0 0.0%	6 100.0%
전체	빈도 %	180 18.5%	236 24.3%	343 35.3%	183 18.8%	30 3.1%	972 100.0%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급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원전 위험'에 대해 평균값(23%)보다 상위관리자급에서 비동의 응답(35%)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A6.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급은 무엇입니까?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7)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 7)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상위관리자급	빈도 %	9 15.0%	15 25.0%	15 25.0%	16 26.7%	5 8.3%	60 100.0%
중간관리자급	빈도 %	50 19.0%	60 22.8%	88 33.5%	53 20.2%	12 4.6%	263 100.0%
일반사원급	빈도 %	84 13.0%	173 26.9%	251 39.0%	111 17.2%	25 3.9%	644 100.0%
기타	빈도 %	0 0.0%	2 33.3%	2 33.3%	2 33.3%	0 0.0%	6 100.0%
전체	빈도 %	143 14.7%	250 25.7%	356 36.6%	182 18.7%	42 4.3%	973 100.0%

미래 에너지(G5)에 대해 **상위관리자급은 재생가능에너지(48.3%)와 원자력(27.6%)를 꼽은 반면, 나머지 직급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쓰레기 재생연료를 꼽았다.**

H7. 소속 계급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전체
		1)석탄, 석유, 천연가스	2) 원자력	3)태양력, 풍력, 수력	4)곡물로 만든 연료	5)쓰레기 재생 연료	6) 기타	
상위관리자급	빈도 %	1 1.7%	16 27.6%	28 48.3%	1 1.7%	12 20.7%	0 0.0%	58 100.0%
중간관리자급	빈도 %	8 3.1%	42 16.1%	128 49.0%	5 1.9%	76 29.1%	2 .8%	261 100.0%
일반사원급	빈도 %	43 6.7%	90 13.9%	274 42.4%	23 3.6%	213 33.0%	3 .5%	646 100.0%
기타	빈도 %	0 0.0%	0 0.0%	2 33.3%	0 0.0%	4 66.7%	0 0.0%	6 100.0%
전체	빈도 %	52 5.4%	148 15.2%	432 44.5%	29 3.0%	305 31.4%	5 .5%	971 100.0%

(2) 소득 수준에 따른 특징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원전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월소득 400만원 이상 응답층이 별로/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원전 위험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적었다.**

A1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급여, 상여금, 배당,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	G2. 환경 위험성_7)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다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1)100만원 미만	빈도 16 21.3%	25 33.3%	23 30.7%	10 13.3%	1 1.3%	75 100.0%
2)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빈도 35 18.7%	58 31.0%	62 33.2%	27 14.4%	5 2.7%	187 100.0%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빈도 100 20.7%	134 27.8%	179 37.1%	59 12.2%	10 2.1%	482 100.0%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빈도 37 16.1%	64 27.8%	84 36.5%	42 18.3%	3 1.3%	230 100.0%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 16.7%	25 19.8%	48 38.1%	27 21.4%	5 4.0%	126 100.0%
6)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0 12.3%	21 25.9%	23 28.4%	23 28.4%	4 4.9%	81 100.0%
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8 21.1%	8 21.1%	13 34.2%	7 18.4%	2 5.3%	38 100.0%
8)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2 10.0%	5 25.0%	7 35.0%	5 25.0%	1 5.0%	20 100.0%
9)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 11.1%	2 22.2%	4 44.4%	2 22.2%	0 0.0%	9 100.0%
10)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 14.3%	1 14.3%	3 42.9%	2 28.6%	0 0.0%	7 100.0%
11) 1,000만원 이상	2 14.3%	1 7.1%	7 50.0%	3 21.4%	1 7.1%	14 100.0%
전체	빈도 233 18.4%	344 27.1%	453 35.7%	207 16.3%	32 2.5%	1269 100.0%

이와 같은 패턴은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어진다. **미래에너지로 원자력을 꼽은 응답자는 응답자의 15.6%였는데, 월소득이 400만원 미만의 13.3%가, 400만원 이상이 23.4%가 원자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23.4%)’,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20.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28.2%)’,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25%)’,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0%)’,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2.9%)’, ‘1,000만원 이상(28.6%)’ 였다.

5) 이념 성향, 정치적 성향, 소속 계급에 따른 특징

(1) 이념 성향에 따른 특징

'경제적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원전의 위험성에 둔감했고, 재생 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적었다.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2. 환경 위험성_7)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하지 않다	5)전혀 위험하지 않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30 11.5%	39 14.9%	86 33.0%	84 32.2%	22 8.4%	261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289 17.4%	442 26.7%	629 37.9%	247 14.9%	51 3.1%	1658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23 28.4%	22 27.2%	23 28.4%	12 14.8%	1 1.2%	81 100%
전체	빈도 %	342 17.1%	503 25.2%	738 36.9%	343 17.2%	74 3.7%	2000 100.0%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7)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28 10.7%	41 15.7%	78 29.9%	65 24.9%	49 18.8%	261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224 13.5%	430 25.9%	626 37.7%	311 18.7%	69 4.2%	1660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25 31.3%	22 27.5%	21 26.3%	8 10.0%	4 5.0%	80 100.0%
전체	빈도 %	277 13.8%	493 24.6%	725 36.2%	384 19.2%	122 6.1%	2001 100.0%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5)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51 19.5%	79 30.2%	78 29.8%	42 16.0%	12 4.6%	262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470 28.3%	679 40.9%	430 25.9%	66 4.0%	15 .9%	1660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38 47.5%	22 27.5%	12 15.0%	7 8.8%	1 1.3%	80 100.0%
전체	빈도 %	559 27.9%	780 39.0%	520 26.0%	115 5.7%	28 1.4%	2002 100.0%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비상 상태'이고, '기후변화는 인류의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는 성향 차이 없이 공감대가 매우 높았으나,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은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에서 높았다.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3.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_1)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비상사태이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75 28.7%	94 36.0%	72 27.6%	19 7.3%	1 .4%	261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612 36.9%	615 37.1%	375 22.6%	42 2.5%	14 .8%	1658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34 42.5%	26 32.5%	15 18.8%	5 6.3%	0 0.0%	80 100.0%
전체	빈도 %	721 36.1%	735 36.8%	462 23.1%	66 3.3%	15 .8%	1999 100.0%

그러나, '탈석탄발전소 정책'과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2)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33 12.6%	63 24.0%	104 39.7%	55 21.0%	7 2.7%	262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207 12.5%	468 28.2%	767 46.3%	198 11.9%	18 1.1%	1658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18 22.8%	27 34.2%	26 32.9%	5 6.3%	3 3.8%	79 100.0%
전체	빈도 %	258 12.9%	558 27.9%	897 44.9%	258 12.9%	28 1.4%	1999 100.0%

C1. 경제적 성장과 분배 중요성 비교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3)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대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 성장이 더 중요하다	빈도 %	17 6.5%	59 22.6%	112 42.9%	66 25.3%	7 2.7%	261 100.0%
2)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빈도 %	202 12.2%	514 31.0%	768 46.3%	159 9.6%	16 1.0%	1659 100.0%
3) 분배가 더 중요하다	빈도 %	19 23.5%	29 35.8%	21 25.9%	12 14.8%	0 0.0%	81 100.0%
전체	빈도 %	238 11.9%	602 30.1%	901 45.0%	237 11.8%	23 1.1%	2001 100.0%

(2)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징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위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H6. 정치적 성향		G2. 환경 위협성_5)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다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 하지 않다	5)전혀 위험 하지 않다	
1) 매우 진보적	빈도 %	31 41.3%	28 37.3%	11 14.7%	5 6.7%	0 0.0%	75 100.0%
2) 다소 진보적	빈도 %	164 33.7%	187 38.5%	121 24.9%	14 2.9%	0 0.0%	486 100.0%
3) 중도	빈도 %	339 32.4%	411 39.3%	247 23.6%	43 4.1%	7 .7%	1047 100.0%
4) 다소 보수적	빈도 %	89 26.1%	129 37.8%	84 24.6%	34 10.0%	5 1.5%	341 100.0%
5) 매우 보수적	빈도 %	13 25.5%	10 19.6%	21 41.2%	7 13.7%	0 0.0%	51 100.0%
전체	빈도 %	636 31.8%	765 38.3%	484 24.2%	103 5.2%	12 .6%	2000 100.0%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이 ‘매우 진보적(90.8%)’, ‘다소 진보적(96.3%)’, ‘중도(91.8%)’, ‘다소 보수적(85.6%)’, ‘매우 보수적(81.6%)’로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H6. 정치적 성향		G4. 기후변화 대응 정책_6)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전체
		1)절대적으로 동의한다	2)매우 동의한다	3)다체로 동의한다	4)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 매우 진보적	빈도 %	26 34.2%	28 36.8%	15 19.7%	7 9.2%	0 0.0%	76 100.0%
2) 다소 진보적	빈도 %	106 21.8%	221 45.5%	141 29.0%	16 3.3%	2 .4%	486 100.0%
3) 중도	빈도 %	192 18.3%	391 37.3%	379 36.2%	75 7.2%	11 1.0%	1048 100.0%
4) 다소 보수적	빈도 %	39 11.5%	115 33.8%	137 40.3%	39 11.5%	10 2.9%	340 100.0%
5) 매우 보수적	빈도 %	2 4.1%	15 30.6%	23 46.9%	6 12.2%	3 6.1%	49 100.0%
전체	빈도 %	365 18.3%	770 38.5%	695 34.8%	143 7.2%	26 1.3%	1999 100.0%

한편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해 진보적인 사람은 재생가능에너지(56.1%)를, 보수적인 사람은 원자력(38.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다소 진보적’이라 응답한 사람의 56.1%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꼽았으나, ‘다소/매우 보수적’이라 응답한 사람은 34.5%였다. 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각각 9.3%와 38.4%가 꼽았다.

(3) 소속 계급에 따른 특징

하층계급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관련 위협'이 크다고 인식(90.4%)하고 있었고, 중상계급의 경우 70.1%가 절대적으로/매우/대체로 위협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층계급(48.8%)과 노동계급(44.9%)의 절반 가량은 절대적으로/매우 위협하다고 응답해, 다른 계급에 비해 위협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H7. 소속 계급	G1. 재해 위험성_7)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위협					전체
	1)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매우 위험하다	3)대체로 위험하다	4)별로 위험 하지 않다	5)전혀 위험 하지 않다	
1) 하층계급	빈도 34 %	62 31.5%	82 41.6%	19 9.6%	0 0.0%	197 100.0%
2) 노동계급	빈도 37 %	85 31.3%	110 40.4%	39 14.3%	1 .4%	272 100.0%
3) 중하계급	빈도 79 %	187 28.1%	284 42.6%	103 15.5%	13 2.0%	666 100.0%
4) 중간계급	빈도 56 %	191 27.2%	319 45.4%	130 18.5%	7 1.0%	703 100.0%
5) 중상계급	빈도 12 %	29 19.7%	62 42.2%	44 29.9%	0 0.0%	147 100.0%
6) 상층계급	빈도 6 %	2 15.4%	5 38.5%	0 0.0%	0 0.0%	13 100.0%
전체	빈도 224 %	556 27.8%	862 43.1%	335 16.8%	21 1.1%	1998 100.0%

하층계급은 재생가능에너지 수용성이 45.7%로 높았고, 중상계급은 원자력 수용성이 36.7%로 높았다.

H7. 소속 계급	G5.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중점						전체
	1)석탄, 석유, 천연가스	2) 원자력	3) 태양력, 풍력, 수력	4) 곡물로 만든 연료	5)쓰레기 재생 연료	6) 기타	
1) 하층계급	빈도 5 %	34 17.1%	91 45.7%	1 .5%	67 33.7%	1 .5%	199 100.0%
2) 노동계급	빈도 24 %	33 12.1%	106 39.0%	7 2.6%	102 37.5%	0 0.0%	272 100.0%
3) 중하계급	빈도 27 %	85 12.8%	348 52.3%	22 3.3%	182 27.4%	1 .2%	665 100.0%
4) 중간계급	빈도 31 %	124 17.6%	321 45.6%	23 3.3%	202 28.7%	3 .4%	704 100.0%
5) 중상계급	빈도 1 %	54 36.7%	56 38.1%	6 4.1%	29 19.7%	1 .7%	147 100.0%
6) 상층계급	빈도 0 %	4 33.3%	7 58.3%	0 0.0%	1 8.3%	0 0.0%	12 100.0%
전체	빈도 88 %	334 16.7%	929 46.5%	59 3.0%	583 29.2%	6 .3%	1999 100.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는 소속계급간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가령 탈석탄 정책에 하층계급의 88.4%, 노동계급의 91.9%가 찬성한 반면, 중상계급은 70.1%에 머물렀다.

3. 요약 및 결론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시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배출책임 기업 규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90% 이상이 동의하였다. 미래 에너지원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46.5%)와 쓰레기 재생연료(29.2%)를 꼽았으나, 원자력(16.7%)에 대한 선호도 확인되었다. 시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의 수용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실천에 있어서 탈화석연료와 탈핵을 연결하는 담론/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원전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책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의 위험에 대해 시민의 95.1% 동의

국내외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위기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린피스(2020) 86.9%, 녹색연합(2021) 97.7%, 문화체육관광부(2022) 96.2%, WiN(93%) 등 우리나라 시민의 절대적 다수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역, 성,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38.6%)이 남성(24.2%)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없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83.1%), 일자리 영향(88.5%), 불평등 심화(77.7%)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 낮아

2021년 녹색연합 조사에서도 기후변화와 일자리 영향 관련 동의(82.1%), 불평등 심화(75.4%)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절대적 다수가 동의했으나, 일자리 영향이나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으로까지의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의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지역, 성,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한편,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86.6%가 기본권 위협에 동의한 반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2.0%였다. 또한 스스로를 매우/다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6.3%, 매우/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3.2%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더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자리 영향과 불평등 심화와 관련한 응답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90.4%), 배출책임 기업 규제(95%), 재생가능에너지(92.9%),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92.3%) 정책에 대한 동의 매우 높아

시민들은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86.3%)도 높았다. 지역, 성,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다만 '중하 계급' 이하 응답자의 87.7%, '중상 계급' 이상 응답자의 77.0%가 동의했다.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스스로 '매우/다소 진보적'이라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95.6%)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매우/다소 보수적'이라는 응답자의 85.1%가 동의했다. 특히 진보 응답자의 23.5%, 보수 응답자의 10.5%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보 0.4%, 보수 3.3%에 불과했다.

미래 에너지원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연료(29.2%), 원자력(16.7%), 화석에너지(4.4%) 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 연료(29.2%), 원자력(16.7%), 화석에너지(4.4%), 곡물 연료(3%) 순으로 응답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응답이 높은 지역은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55.4%, 강원/제주가 53.1%였고, 원자력은 경북권(대구/경북)이 2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성은 재생가능에너지(43.3%)와 쓰레기 재생연료(40.8%), 남성은 재생가능에너지(50.1%)와 원자력(27.1%) 응답이 높았다. 또한, 직장의 직급별로는 '상위관리자급(대표, 임원, 부서의 장, 공장장 등)'은 재생가능에너지(48.3%), 원자력(27.6%), 쓰레기 재생연료(20.7%) 순이었고, 일반사원급(실무 담당,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은 재생가능에너지(42.4%), 쓰레기 재생연료(33.0%), 원자력(13.9%) 순이었다. '매우/다소 진보적'이라 응답한 사람의 56.1%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꼽았으나, '다소/매우 보수적'이라 응답한 사람은 34.5%였다. 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각각 9.3%와 38.4%가 꼽았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높았으나, 추가 건설에 대한 동의 상대적으로 높아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74.9%)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58%가 동의했고,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49.5%)이 동의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여성(50.7%)보다 남성(65.6%)이, 진보(45.0%)보다 보수(75.6%)가, 분배 우선(47.5%)보다 성장 우선(75.2%) 응답자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그 외 연령, 노조원 유무, 직장규모, 직급, 지위, 소득수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참고문헌〉

임성호(2021), 〈정치학 방법론〉, 형설출판사

박이레, SONG CHENGYU, 유나리(2021),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1호(2021.03)

갤럽리포트(202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WWS 다국가 비교 조사

녹색연합(2021), “2021년 기후위기 심각성과 기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2020),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2),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김종진, 양경욱, 김영욱(2021), “기후위기와 지역 노동시장 실태조사”,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토론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 조사결과

지정토론 불평등 시대,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의식 토론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불평등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선별하는 등 공들인 설문 디자인이며, 분석에서도 ISSP, KGSS, 여러 언론 생산 데이터를 비교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유의한 함의를 전달하고 있음.
- 원고의 현재 상황을 볼 때 향후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분석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1. 핵심 분석변수 다양화 필요

- 본 논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계층적 사회집단 간 인식 변화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렇다면, 소득·자산이나 세대에 따른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더 유의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종사상 지위’변수만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변화의 상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음.
- 본 데이터에서 ‘유고용 사업주’는 2,000 표본 중 61개, 3.0%에 지나지 않고 노동자 표본은 41.3%를 차지함.
- 이런 조건에서 ‘사업주 vs. 노동자’라는 단일 변수로 긴 시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보다는 소득/자산/세대 변수로 변화의 흐름을 추적한다면 좀 더 역동적인 인식 변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1.1〉 가중치 적용된 표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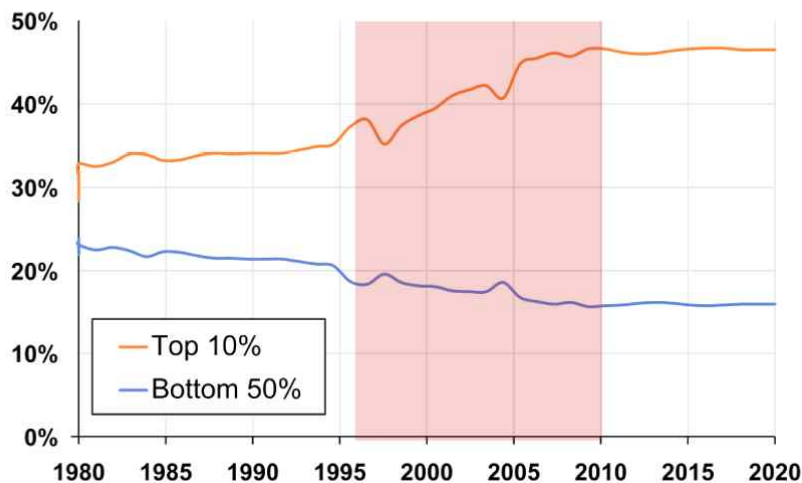
Klas4/Klas5	빈도	백분율
0 비경활인구	728	35.8
1 유고용 사업주	61	3.0
2 무고용 자영업자	239	11.9
3 관리전문직	134	6.6
4 노동자	839	41.3
- 정규직노동	470	23.2
- 비정규직노동	368	18.2
합계	2000	100.0

- 특히 논문의 주제인 ‘불평등 인식 변화’ 추적에는 세대 변수가 중요함.
- 2000년대부터 2023년 사이에 한국 사회 불평등 상황의 변화를 모든 세대 시민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로 인식하지는 않으며, 특정 사회경제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집단별로 차별적인 인식 변화를 공유할 가능성이 큼.

- 논문이 보여주듯이, 우리사회는 ‘1997 IMF 외환위기’ 이후 10~15년 동안 불평등 확대를 경험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구조화된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은 채 안정화(?)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음.
- ‘IMF위기’ 이전에 주 경제활동을 했던 세대와 1997~2010년, 2010년 이후 세대는 계층이동 가능성 등 불평등 인식이나 불평등 시정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2.1〉 한국 상위 10% 및 하위 50% 소득집단의 소득점유율, 1980-2021(WIR2022:219)



〈표 3.7〉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 출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유한 집안	ISSP 2009년				한국 KGSS			2023 B7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2009	2014	2021	
절대적으로/매우 중요하다①	13.5%	28.4%	32.4%	29.6%	44.5%	44.6%	62.6%	59.9%
대체로 중요하다	33.8%	35.3%	29.3%	31.1%	35.8%	39.1%	26.5%	30.6%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②	52.7%	36.3%	38.3%	39.3%	19.6%	16.4%	10.9%	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91	1357	1198	1530	1596	1370	1203	2000
중요함-중요않음 (①-②)	-39.2%	-7.9%	-5.9%	-9.7%	24.9%	28.2%	51.7%	50.4%

○ 예컨대, 〈표 3.7〉은 2010년대 이후 이미 ‘수저계급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사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에 반영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음. 특히 2014년과 2021년 사이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런 인식 변화는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큼.

〈표 3.3〉 임금 결정 기준 평가: “B4.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요인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큰 차이 1,3 차이 없을 것)

요인별 임금차이 2023 B2	B4_1 업무 능력	B4_2 근무 태도	B4_3 근속 연수	B4_4 부양 가족수
① 임금이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	38.2	35.9	22.7	9.2
② 임금이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	57.3	57.4	67.6	45.1
③ 임금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4.5	6.7	9.7	4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① - ③	33.7	29.2	13	-36.4
〈비교〉				
2018(한국리서치) ① - ③*	13.7	38.3	2.1	-54.1
2018-2023 증감	20	-9.1	10.9	17.7

요인별 임금차이 2018(한국리서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근속 연수	부양가족수
①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	22.8	43.4	16.5	6.3
②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	68	50.5	70.1	34.4
③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9.1	5.1	14.4	6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① - ③	13.7	38.3	2.1	-54.1

- 〈표 3.3〉도 ‘세대’와 ‘시간’에 따른 사회변화 변수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임.
- 2018년에 비해 2023년 ‘근속연수’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유의하게 늘었는데, 어느 집단에서 늘었을까?
-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 변수도 세대 간 인식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임. 전반적으로는 업무능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근무태도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낮아졌지만,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면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음.
- 대기업과 고자산층의 이해를 편향적으로 대변하거나 노출시키는 언론환경이 ‘태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회담론을 형성시키고 있고, 이런 영향 하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능력’ 기준을 중시할 수 있음.
- 또는 2010년대 이후 경제활동의 출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던 세대들에게 ‘능력’중시 인식은 ‘무능한 정규직이 유능한 비정규직보다 더 대우를 받는 시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 시장과 한국사회 변화, 언론환경의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능력중시’ 인식 확산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는 없음.

- 반면, 〈표 4.9〉는 소득이나 자산집단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해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한 문항임.
- 논문은 한국 시민들의 인식이 ‘복지증세 동의는 증가했으나 복지부담 동의는 축소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이 기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실패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결론적 해석이 가능하려면 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해 어떤 집단에서 증가하고 축소했는지, 왜 그런 인식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검증 절차가 필요함.

〈표 4.9〉 복지증세 부담 의향: “사회복지 확대 위해 세금을 더낼 의향 있는가?”

한겨레조사	증세 납부 찬성	증세 납부 반대
2015.5	50%	50%
2017.3-4	65.3%	31.5%
2017.8	71.7%	26.2%
2019.9	41.7%	58.3%
2023.2 B3	36.3%	63.7%

자료: 2015-19 각년도 한겨레 의뢰 여론조사.

2.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설과 검증 필요

- 둘째, 논문은 비교적 긴 시기 인식 변화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해석에서는 ‘시간’ 변수의 중요성을 덜 고려하고 있어, 향후 분석에서는 ‘시간’ 변수의 영향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시간’ 변수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경험이 쌓이거나 담론지형의 변화 등 해석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해석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예컨대, 〈4.4〉의 해석에서 논문은 ‘시장 불평등이 크다는 인식 변화는 미미한 반면 시정할 정부의 책임 인식이 축소되었으므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지 확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
- 이 해석은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이 있음. 한 가지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오독임. 〈표 4.4〉에서 정부책임 변수의 변화 변량이 소득격차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량보다 큰 것은 맞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방향으로의 변량이 커진 것임.
- 만약 데이터 보고에서 오류가 있었고 반대 의견으로의 의견이 유의하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해석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논문은 시민들이 ‘한 사회에서 소득 격차를 시정할 책임주체가 정부이거나 국내시장의 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 책임 인식이 줄었으므로 시장 자율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하고 있음.

〈표 4.4〉 한국 소득 격차 인식 및 정부 역할 의견의 시기별 변화 (1 매우찬성-5 매우반대) [KGSS]

	INCGAP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GOVEQINC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V33/V32 (소득격차 인식 정부정책 전환 지수)
2009	1.70	2.07	1.22
2010		2.20	
2011	1.75	2.25	1.29
2014	1.77	2.20	1.24
2021		2.50	
2023	[B1_1] 1.75	[B1_2] 2.21	
2009-21 증감	0.07 (2009-14)	0.43	0.02 (2009-14)
2009-23 증감	0.05	0.14	
2021-23 증감	-0.02	-0.29	
〈참조〉			
미국 2009년	2.29	3.35	1.46

○ 그러나 국제행위자 변수를 고려한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함. 한국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2011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를 지켜보았으며 2018년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 파동, 수차례에 걸친 중국의 비공식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국내영향을 경험했음.

- 이런 경험을 고려한다면, ‘정부책임’ 인식이 줄어든 것이 ‘시장자율’에 대한 동의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정부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대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함.

3. 변수 설정의 오류 수정

○ 셋째, 논문은 가설을 검증할 변수 선정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음.

○ 논문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시정할 바람직한 대안 혹은 방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중 하나로 〈표 5.5〉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문항은 해당 주제의 측정변수로 적절하지 않음.

〈표 5.5〉 한국사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 “귀하께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2004.5.7-9)

바람직한 방향	2004 유효응답	2023 C4	2004-23 증감
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45.2%	53.5%	8.3%
②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51.6%	43.3%	-8.3%
③ 기타	3.2%	3.2%	0.0%
전체	100.0%	100.0%	

○ 이 문항에 대한 2023-2004 인식 변화의 변량이 논문의 주장처럼 유의미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해석처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불평등 시정의 대안 인식’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음.

○ 중요한 것은 <표 5.1>, <표 5.3>의 결과이며, 두 데이터는 일관되게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 중시’ 태도는 약화되고 있고 ‘경제적 풍요’ 기준에는 유의한 변동이 없으며 전체 비중도 14%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임.

- <표 5.3>에서 복지국가 대안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분은 ‘경제적 풍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이동했음.

4. 강한 주장 가설의 재고

○ 전체적으로 논문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데이터 해석의 무리함이 있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는 주장 가설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 논문은 서두에서 '촛불항쟁을 계기로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들도 포용하는 상생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5년 뒤 치러진 2022년 대선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의제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선택은 사회적 사회통합보다는 시장지배와 경제성장이었다. 5년 뒤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핵심 문제의식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5년 사이에 ‘시민들의 선택이 정반대로 바뀐 것은 집권 정부의 실패라고 결론 내림.

○ 그러나 이 주장과 결론은 여러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함.

- 우선 2017년 대선에서 의제가, 혹은 핵심의제 중 하나가 과연 평등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또한 2022년 대선의 선택이 과연 시장지배와 경제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음.

○ 논문이 이 주장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주장이 변수의 선정이나 데이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재고가 필요함.

지정토론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성평등 영역) 토론문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번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는 성평등과 젠더 이슈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2003년 계급의식조사와 2012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과 비교할 수 있는 문항으로 조사하여 지난 20여 년 간의 성의식과 성평등 의식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의식과 젠더 이슈 관련한 응답에서 성별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연령별로도 응답에 대한 비율 차이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사회 성평등 분위기

“우리사회의 태도, 행동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녀동등에 대한 응답이 현저하게 낮아진 점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현저하게 퇴보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 성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남녀동등보다는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3%나 되고 여성들도 82.5%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남성중심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최근 4년 동안 여성들이 느끼는 남성중심의 사회분위기라는 진단이 29.5%p 증가한 점은 우리 사회 백래시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남성들이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인식한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는 점은 이러한 백래시가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의 기존 권력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라기보다 남성들의 박탈감과 피해의식에 의해 추동되는 백래시라는 점과 이러한 청년층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성평등 관련 제도를 퇴보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20대 남성의 42.3%, 30대 남성의 41%가 여성에게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점은 최근의 20대 남성 현상으로 표상되고 있는 청년층 남성의 정서와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은 20~30대와 40~50대, 60대 이상이 매우 다른 현실 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60대 이상과 차이를 보입니다.

연령집단을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연령구분이 39세 이하,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65세로 구분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18세이상에서 34세 이하, 35세 이상에서 54세 이하, 5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령집단의 구분 기준이 연령집단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35세에서 54세 연령층으로 묶는 것은 너무 다양한 생애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해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일터, 정치, 가정에서의 성평등의 성취에 대한 인식은 가정영역이 가장 높고 일터, 정치 영역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일터와 관련해 60대 이상의 여성은 성취에 대해 59.7%로 인식한 반면 50대 이하는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 비율이 더 낮습니다. 남성은 40대가 72.3%로 일터에서의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정 수준이 높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의 영역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20%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준이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 정도면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성들은 아직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인데, 성별에 따라 성평등의 성취와 기대수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현실의 성불평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방향에서도 성별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 성평등이 성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히 낮았고 여성들은 28.2%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취업한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 등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된 인식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은 어려워진다”의 경우 현실적으로 육아가 여성에게 맡겨져 있고 일생활균형의 직장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이 자녀가 있는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정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와 같은 문항이 아니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활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사와 육아가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워진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정이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한정되거나 일차적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로 등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수입활동, 여성은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문항에서 성별격차가 줄어들고 남성들도 높은 비율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요하게 조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이 먼저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4.8%가 반대하였는데, 50대 이상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인식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세대 남성을 자녀세대로 하는 여성들이 성역할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들은 50대 이하에서 70~75% 비율로 비슷한 비율을 갖는데, 60대 이상은 동의비율이 낮습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남성중심사회에서 확실하게 기득권을 가지며 살아왔고 이러한 삶의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평등에 대한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작용하는 온정적 가부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들도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36.3%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여성들 내부에서도 상이하고 여성의 성역할이나 일정 정도의 한도 내에서 평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성들 내부에서의 인식 격차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군가산점제 부활, 남성 육아휴직, 여성할당제, 남성교원할당제를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문항들은 공정과 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쟁적인 이슈들을 묶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항의 설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독해될 수 있는 논쟁적인 배치입니다.

최근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논의 속에 여성징집제나 군가산점제 부활 등의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쟁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군대 문제가 자리매김 되어온 냉전시대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군가산점제는 군사정권의 당근정책으로 기능하면서 군필자 우대조치를 통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차별로 이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군가산점제 부활이라는 이슈는 성평등 정책이기 보다는 징병제로 인해 청년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감정에 부응하여 논의되고 있는 젠더관련 이슈일 수 있는데 이를 성평등 정책으로 분류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설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여성할당제와 성비불균형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산술적 평등을 맞추기 위한 남성교원할당제를 비교 정책으로 설문을 구성한 점도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 일생활균형의 직장문화조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 안보정책,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문제 등은 매우 많은 성평등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4개 문항은 성평등 정책과 관련이 없는 문항도 포함되고 있고 연속해서 배열할 때 여성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 조치이나 군가산점제가 군필자에 대한 우대조치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식의 정치철학 없는 기계적 평등의 문법으로 성평등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위함을 논할 때 다수결이 갖는 위험은 의제세팅의 권한을 독점한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이 의제를 세팅하고 정치적 토론과 주장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담론의 기술의 하나라면 설문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의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엇을 질문하고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은 여가부 폐지와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로 측정하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은 추진과정 자체가 매우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단순하게 질문하고 그 결과를 시민의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잘할 것이다 보다 잘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 찬성의견이 더 높다는 두 가지 결과를 두고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젠더라는 말 자체, 그리고 여성이라는 용어도 점점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이 성주류화되어서 여성정책을 따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의 성맹목성을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 정책을 질문하는 아이러니와 응답 결과의 불균질성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토론 없이 추진되는 백래시 정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토론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안전·보건 영역) 토론문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예방의학 전문의)

- 결과 해석의 주의점. 경험 세계가 항상 실재(實在)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인식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재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인식이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임.
-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불안’. 노후의 안녕에서부터 폭력 범죄, 사고와 산재,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 객관적 여건을 보자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해졌음.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안전망이 자리를 잡았고, 강력 범죄, 교통사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숫자도 느리지만 분명한 감소 추세임.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 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 이를 ‘오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움
- 일단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음. 예전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현황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음. 예컨대 일터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의 숫자는 과거에 훨씬 많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보이지 않았고 공론장에 아예 올라오지 못했음. 지난 몇 년 동안 산재 노동자 당사자나 유가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가 실재하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출현하거나 기존의 위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함. 이를테면 디지털성폭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일상에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버렸고, ‘백 년 만의’ 더위, 추위, 가뭄, 폭우라고 부를만한 사건들이 기후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점점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음.
- 게다가 사회적 불평등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킴. 국내 실증연구 결과들은 한국사회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아직 계층이동성이 높다고 보고하지만, 시민들의 체감 수준은 그와 다름. 특히나 출발선이 달랐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인식은 불안을 극대화시킴.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 기대와 달리) 비정규직이나 무고용 자영업자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사람들의 높아진 위험 인식에 부응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함.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건강보험에도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크고, 간병서비스는 보장이 안 되며, 상병수당은 아직 제공되지 않음. 산재보험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집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높은 불안 수준은 집단과 개인 수준에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부동의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위험과 사회문제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이 반드시 정의와 평등의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아님. 불안은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각자도생의 이데올로기로 연결되기 쉬움. 코로나19 유행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음. 우리 사회의 과제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더욱 정의롭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희망적인 것은,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대응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는 것임. 노동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 강화, 불필요한 야간노동의 최소화, 공공의료 강화 같은 정책의제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동의했음. 물론 이러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분담할 용의가 있는지 조사한다면,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함. 또한 ‘경험치’에 따라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나 지지의 수준을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젊은 세대에서 공공병원 확충이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현실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되기 어려움.
- 시민들 각자의 불안과 우려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공적’ 문제이며 그렇기에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사회적 보호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끝)